

언어 규범 정책의 방향*

민현식**

1. 국어 생활의 과제

우리 민족은 단일 언어를 쓰는 단일 민족 국가로 이런 경우는 세계에
서 매우 희귀하다. 미국은 영어를 공용어(公用語)로 쓰지만 수십 여 민족
이 살고 있고 소수 민족들은 아직도 각 가정에서 각 민족의 모국어를 쓰
는 경향이 높다.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국어를 공용어로
쓰지만 각 지역의 민족마다 고유 언어도 허용하고 있어 조선족 자치구에
서는 우리말이 공용어로 쓰인다. 러시아 연방도 다양한 민족과 언어로 구
성되어 있고 가까운 일본도 아이누족 등의 소수 민족이 살고 있어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다.

이들 수많은 나라들이 다중 언어 국가로서 다중 언어 문화로 인한 민
족간의 언어나 종교의 갈등을 다양하게 겪고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 본고는 2000년 12월 13일 국립국어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어문 규범
분야> 주제로 발표한 것을 부분 개고한 것이다.

** 서울대 국어교육과.

런 민족 내부의 언어나 종교 갈등이 없음을 감사하게 생각할 일이다. 오히려 단일 언어 민족이기에 강력한 민족 통합력(民族統合力)을 가지고 발전해 올 수 있었는데 방심하여 외세에 침략과 식민 지배의 고통을 당하였음을 생각할 때 단일 언어 민족의 축복을 활용하지 못한 점을 반성할 일이다.

돌이켜보면 국어는 단일 언어의 축복을 받았지만 안정적으로 발전하여 오지는 못하였다. 오랫동안 한자를 이용한 차자법(借字法)에 의존하여 문자 생활을 하여 왔기에 언문 불일치의 불완전한 언어 생활을 하여 온 것이다. 그 후 한글이 창제되면서 언문 일치의 생활이 가능하여졌지만 한글을 천시하고 여전히 한문 문화만을 숭상하여 근대 시민 국가로의 발전이 더디었고 국치(國恥)까지 당하였다.

이 때 비로소 언문 불일치한 생활이 근대화에 걸림돌이 됨을 알고 주시경(周時經) 선생은 국어 연구에 일생을 바쳤고 그 분의 나라 사랑과 국어 사랑의 정신을 본받은 조선어학회의 학자들이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어문 규범들을 완성하고 사전을 만들어 자주적 민족 문화 발전의 기초를 놓았다. 이분들의 헌신이 아니었다라면 우리는 해방 후에도 여전히 우리 말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혼란을 거듭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말과 글이 언문일치(言文一致)의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개화기 이래 겨우 백여 년에 불과하며 일제의 국어 말살 정책으로 신음하다 겨우 살아난 해방 후부터로 본다면 불과 오십여 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상 남북 분단으로 한민족의 국어 생활이 다시 이질화(異質化)의 길을 걷게 된 것을 생각한다면 국어는 아직도 제 구실과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한 국어의 하나 됨을 실현하고 나아가 국어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잘 살려 발전시키며, 세계의 문자학자들이 칭찬하며 인류 지혜의 산물이라고 칭찬하는 한글의 우수성과 잘 조화시키고 활용하여 21세기 문화 경쟁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어는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자.

첫째, 표준 한국어를 확립하여야 한다. 우리는 교양인이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라고 하였지만 표준 한국어의 정체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한국 전쟁 후 서울 인구 구성이 변화하면서 서울말에는 남부 방언의 요소가 많이 끼어 들어 ㅈ-ㅊ의 변별이 무너지고 있고 '썰다, 째다'처럼 어두 된소리가 증가하는 등 서울말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 과정에서 순수 서울말의 정체가 불투명해졌고 서울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표준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표준어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학교의 규범 문법인 표준 문법도 정밀하게 완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외국인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 추천할 통일된 체계의 문법서조차 제대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은 평양말을 '문화어'라 하여 표준으로 하고 남한은 서울말을 표준어로 하여 상당히 이질화한 상태라 남북 통일 시대에는 남북 통일의 표준어 확립을 위해서도 한국어의 표준어의 확립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중요하다.

둘째, 표준 언어 규범의 준수를 통하여 한국어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불과 50여 년 전만 하여도 규범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의 글쓰기는 맞춤법 등이 혼란스러웠는데 해방 후인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한글 맞춤법은 물론 외래어 표기와 로마자 표기를 규정대로 쓰지 않고 제멋대로 쓰고 있다. 선진국 국민일수록 자국어 사용 의식이 강하고 표기 규범을 준수하고자 애쓰는 점을 생각할 때 국민적 반성이 필요하다.

셋째, 문체나 화법에서 표준 문체의 확립이 필요하다. 가령, 논문이나 공문서, 편지 쓰기와 같은 문서 작성에서 아직도 표준화하지 않은 글쓰기가 많다. 논문도 주석 달기와 참고문헌 작성법 등이 학문 분야마다 틀리고 같은 학문 안에서도 달라 학문의 발전은 물론 국어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법률문, 판결문, 공문서에서 아직도 어려운 한자어를 쓴다는

가 구태의연한 장문(長文)의 문체를 써서 의미 해독에 어려움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다.

넷째, 국어 정보화에도 앞서야 한다. 앞으로는 컴퓨터에 잘 구현(俱現)되는 언어가 세계인에게 더욱 유용할 것이므로 국어와 컴퓨터를 관련지는 연구에서도 뒤지지 말아야 한다.

가령, 컴퓨터 상에서 훌륭한 한글 문서 작성기를 만드는 일, 문서 작성기 상에서 한글 맞춤법 검색기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일, 한중일 삼국 한자 표기를 모두 실현하는 일, 외국어와 국어의 상호 자동 번역기를 만드는 일, 자동 통역 장치를 개발하는 일, 컴퓨터가 국어로 된 음성 언어를 인식하는 일, 전자 국어 사전이나 전자 백과 사전을 완벽하게 갖추는 일,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컴퓨터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 고전 문헌을 전산 자료로 입력하고 검색하는 일 등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하여야 할 일들이다.

다섯째, 국민의 언어 생활에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통일된 국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세종 시대에는 세계에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집현전'(集賢殿)과 같은 어문 연구 기관이 있었고, 개화기에는 '국문연구소'를 만들어 어문 규정들을 만들었다. 정부 수립 후에도 문교부에 어문 정책 부서를 두었고 지금은 문화관광부에 '국어연구원'이 연구기관으로, '국어정책과'가 언어정책 행정 기구로, '국어심의회'(國語審議會)가 어문 정책을 심의 의결하고 있지만 어문 정책의 집행과 추진에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격인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여섯째, 세계화 시대에는 외국어 내지 외래어의 범람을 막고 외국어는 즉각 번역 차용(翻譯借用)하도록 하여 고유어를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세계화 시대일수록 외래 문화의 유입은 불가피하지만 외래 문물이 들어 오면서 일어, 영어 등이 덩달아 들어와 국어의 자리를 차지하여 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어를 고사(枯死) 시키는 사태이므로 우리는 외래 문물

어를 즉각 번역하여 차용할 수 있도록 국가, 언론, 학교, 가정이 국어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외국어 작품, 논저, 신문 기사를 번역할 때는 한국어에도 깊은 이해를 가진 번역가나 전문 기자들만이 바르게 번역을 하도록 하여 오역(誤譯)과 악역(惡譯)으로 인하여 국어를 오염시키는 일도 막아야 한다. 따라서 외국의 언어 문화를 전공하는 이들이야말로 우리의 언어 문화에도 정통하도록 하며 한국어를 아름답게 구사하도록 훈련시킬 일이다.

일곱째, 한글 전용을 하더라도 한자 교육은 계속하여 전통적인 한자 문화의 지속적 보존 발전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조상들이 한자로 생활하여 왔고 한문 문헌이 산적하여 있는 만큼 한자 문화의 부정과 단절은 우리의 조상과 전통에 대한 부정이고 궁극적으로 자기 부정에 이른다.

따라서 한자 문화를 계승할 전문가를 키우고 국민 누구나 기본 한자 2000여 자는 읽을 수 있도록 한자 교육을 강화하여 한자어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며 한자어의 조어력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한자 학습 부진으로 한자어 이해력도 떨어져 한자어를 통한 조어력은 더욱 쇠퇴하고 고유어의 조어력은 한계가 있어 주요 전문 용어는 일본식 한자어나 영어가 무방비로 더욱 많이 들어오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여덟째, 합리적인 토론 문화를 정착시켜 대화와 타협의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남북 통일 시대에는 더욱 민족 단합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라도 고급스럽고 품위 있으며 교양인다운 언어 생활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감정적 언사나 비속어를 추방하고 교양 한국어 실천 운동이라도 대대적으로 펼쳐야 한다.

이러한 품위 있는 언어 생활에서라야 아름다운 시, 소설, 희곡이나 노랫말이 살아 있고 위대한 문학과 문호(文豪)가 탄생하여 세계인에게 위대한 한국 문학과 예술을 알리게 될 것이다.

아홉째, 21 세기는 남녀 평등의 문화가 더욱 발전할 것이므로 남존여비의 폐습이 아직도 생활과 언어 속에 남아 있는 우리는 성차별적(性差別的) 언어 생활을 삼가고 남녀 평등의 언어를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가령, ‘여자가 뭘 안다고, 여자가 속이 좁다, 여자는 원래 그래’처럼 여성을 차별하여 말하거나 반대로 남자에게 ‘남자가 제제하게 그게 뭐야, 남자는 부엌에 가면 안돼, 남자는 원래 그래’처럼 표현하는 것도 모두 성차별적 언행이므로 삼가야 한다. 이러한 남녀 평등 사회의 실현도 결국은 언어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각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국어를 발전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살펴보았는데 이것들은 국가가 할 일, 국어학자가 할 일, 언론 방송인이나 교사와 같은 전문 직업인이 할 일, 부모가 할 일, 국민 각자가 할 일 등으로 나뉜다. 이 중에 언어 규범에 관한 것으로는 대체로 첫째, 표준 한국어의 확립, 둘째, 표준 언어 규범의 확립, 셋째, 표준 문체의 확립과 같은 것이 해당된다. 이러한 국어 규범의 문제를 다루려면 언어 정책 기관이 우리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하여 왔는지 역사적으로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언어 정책사에 나타난 언어 규범의 역할

우리 나라에서는 언어 정책이 국가적으로 관장되어 온 전통이 어느 정도 있다. 삼국 통일 후 신라 경덕왕 때의 한자식 지명 개정 작업이라든가 고려 시대부터 사역원(司譯院)을 설치하여 역관(譯官)을 양성한 것도 중앙 정부의 중요한 언어 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조선시대에 집현전을 통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가 언어 문제를 국가적으로 추진하여 온 전통을 보여 준다. 그러다가 한글이 천시되면서 중앙 정부의 언어 정책 기능이 쇠퇴하였지만 ‘규장각’(奎章閣)의 운서(韻書) 편찬 등에

서처럼 어느 정도 정부의 관여가 있었다.

쇠퇴하였던 중앙 정부의 언어 정책 기능이 회복된 것은 너무 늦은 시기인 개화기 때에 '국문연구소'를 설치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미 정부의 자주권이 상실되어 가는 시기인지라 국문연구소는 '국문연구의정안'을 만들고는 국가와 운명을 같이하였다. 다행히 이 의정안에서 지향한 표의주의의 정신은 1930년대에 '언문철자법', '한글맞춤법통일안' 등에서 결실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보면 국망(國亡)의 한 원인으로 세종 이래 언어 정책이 실종한 것도 들 수 있다. 언어 정책 기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언어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거나 알더라도 방치하였으며 그 결과 체계적으로 서구 신문물을 수용하기 위한 도구인 언어를 정비하는 일에 소홀하여 자주 정부 수립을 통한 근대화의 추진에서 능동적 자세를 취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 왔고 국망에 이른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증거로 우리는 조선시대의 문체(文體) 문제를 들 수 있으니 사대부층과 보수파를 중심으로 한 한문체 사용층과 평민층과 개화파를 중심으로 한 한글체 사용층은 문체 경쟁을 통하여 문체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갈등을 방치한 결과 지도층과 평민층의 단합도 이루지 못하였고 근대화를 담을 도구로서의 언어 문체를 능동적으로 정비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일한 혼용체의 모방체인 '서유견문(西遊見聞)'의 문체와 같은 개화기식 국한 혼용체가 189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개화기 이래 40여 년을 지배하도록 방치하였다.

다행히 실종된 언어 정책은 일제하에서 민간 운동으로 나타나 조선어 학회의 민간 주도적 어문 규범 운동이 국어와 국문을 우리 나라의 근대화에 맞게 개조하는 데 이바지하였고 군정 시대나 정부 수립 후에도 어문 정책 기능은 국망의 치욕을 극복하고 새나라 건국을 위해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오늘에 이른다.

이상과 같이 언어 정책사를 간략히 돌아볼 때 우리 민족의 발전에는 언어 정책이 국가 주도이었든지 아니면 민간 주도이었든지 간에 어느 경우이든 통일 신라기, 조선 건국초, 조선 말, 일제 강점기, 해방 후 등과 같은 민족 변혁기에 민족 발전과 민족 통합에 긍정적 역할을 하여 왔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장차 다가올 남북 통일이라는 민족 대변혁기를 앞둔 오늘의 시점에서 언어 정책을 바르게 세우고 추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3. 언어 정책 수립의 모형 — 프랑스식과 미국식의 조화

우리가 언어 정책을 구상할 때는 그 방향이 여러 가지로 나뉜다. 이스트먼(Eastman 1983: 28)은 다음의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

- ① 언어 순화(language purification): 언어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오용 언어를 순화하는 정책
- ② 언어 부활(language revival): 고어를 복구하거나 죽은 언어를 재생하는 정책
- ③ 언어 개혁(language reform): 어휘나 철자법 개혁을 통해 언어 사용을 간결하게 하는 정책
- ④ 언어 표준화(language standardization): 한 언어나 지역어를 국가의 공통어로 수용한다거나 하는 공용어 정책
- ⑤ 어휘 현대화(lexical modernization): 기존 어휘부와 현대 과학 사회의 신어를 다루는 정책

우리의 경우 국어심의회의 5대 분과(한글 분과, 한자 분과, 국어정보화

분과, 표기법 분과, 국어 순화 분과)의 임무가 국어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보여 주는데 이 중에 규범 관련 사항은 4 표기법 관련 사항을 들 수 있다. 우리가 후술할 바와 같이 언어 단위에 따른 규범을 '단어 규범, 문장 규범, 담화 규범'의 3 유형으로 나눌 때 단어 규범인 표기 규범은 4 표기법을 언급하고 있으나 문장 규범인 문법에 관한 사항은 전무하고 단지 담화 규범은 '화법'이란 표현으로 순화 분과 임무에 언급하는 정도이다.

전세계 언어 정책 동향을 보면 프랑스처럼 정부가 언어 정책 기구를 설립하고 언어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미국처럼 민간 자율로 언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나라가 있다. 우리 나라는 프랑스처럼 정부가 관여하는 면이 강한데 이 방향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그런 정책 기구가 없어도 표준 영어의 개념이 존재하며 규범 논의가 없이 잘 유지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많다. 즉 미국에서는 각종 지역 방언이나 사회 방언형에 대하여 사전, 문법서 등에서 그러한 방언형 정보를 주어 전세계 누구나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 그런 방언형을 피하고 자연스레 표준 영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들 사전류의 편집 출판자들은 그 나름대로 표준 영어의 기준을 구축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Biber et al. 1999: 18).¹⁾

그런 점에서는 우리 나라도 정부 기구 방식과 민간 자율 방식의 조화를 도모하여 정부의 언어 정책 기구는 큰 방향만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각종 사전 출판 시장과 같은 민간 차원에서 표준 한국어의 모든 언어 규범이 통일성을 띠고 통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분간은 프랑

1) There is no official government-sponsored academy that regulates usage for the English language, but there is still a widely recognized standard English: the dialectal variety that has been codified in dictionaries, grammars, and usage handbooks. This same variety has been adopted by most major publishers internationally, resulting in a very high degree of uniformity among published English texts around world.

스의 국어 정책을 모형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프랑스 정부의 국어 정책 모형과 정책 기구를 개관하여 본다.²⁾

프랑스는 자국의 언어를 보호하기 위해 1994년 8월 4일자 법령에 의해 프랑스어 사용 관련법(La loi du 4 août 1994 relative à l'emploi de la langue française)을 통과시켰다. 혹자는 이 법이 영어에 대항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조치가 아니냐고 비난하겠지만 이 법률이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미 1975년 12월 31일에 이와 유사한 법을 만들었으며 1994년에는 1975년의 법을 좀더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강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프랑스어 사용 관련법

1994년에 통과된 프랑스어 사용 관련법은 이 법을 제안한 당시 문화부장관 자크 투봉(Jacques Toubon)의 이름을 빌어 투봉법이라고도 부른다. 이 법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며 프랑스 국내에서의 프랑스어 사용에 관하여 1975년에 바-로리올(Bas-Lauriol) 법이 채택된 바 있다.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프랑스 내에서의 프랑스어 사용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그런데 1975년의 바-로리올 법은 국회에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는데 반하여 1994년의 투봉법은 특히 하원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논쟁의 중심은 프랑스어의 수호와 외국어 어휘 사용에 대한 것이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 외국어 어휘의 사용이 현실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외국어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프랑스어가 더욱 풍부해질 것이라고 프랑스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파악한 문화부는 일반 소개 부문에 다음과 같이 말하

2) 이하 프랑스의 언어 정책에 대해서는 숙명여대 불문과 조항덕 교수의 자료 제공과 도움에 힘입었다.

고 있다.

“Ce texte, en traduisant le principe constitutionnel selon lequel la langue de la République est le français, vise à doter la France d’une véritable législation linguistique, comme c’est le cas dans bien d’autres pays. La loi de 1994 n’a pas été inspirée par le souci de préserver la pureté du français en faisant la chasse aux mots étrangers : elle porte sur la présence du français et non sur son contenu. Elle marque la volonté de maintenir le français comme élément de cohésion sociale et moyen de communication internationale, dans une France qui se veut ouverte sur l’extérieur et partie prenante de la mondialisation des échanges.” (프랑스의 언어는 프랑스어라는 헌법의 원칙을 환기시켜 주는 이 텍스트는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랑스가 진정한 언어 정책을 갖고 있음을 밝혀 준다. 1994년 법은 외국어 단어를 배척하면서 프랑스어의 순수함을 간직하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법은 그 내용보다는 프랑스어의 존재에 중점을 둔다. 즉, 외부 세계에 열려 있고 범세계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프랑스에서 프랑스어가 사회 응집력을 가져오는 요소가 되고 국제적으로 의사 소통의 수단이 되기를 바라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다시 말해 프랑스어 관련법은 프랑스인들이 일상 생활이나 직업 세계라는 상황에서 프랑스어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를 프랑스인들에게 보장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어는 교육, 직업, 교류, 공공 서비스 등에서 사용되는 언어이며 프랑스어권을 구성하는 여러 국가들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다.

이 법의 적용을 위한 구체 사항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전문 내용은 뒤 부록 참고).

- ①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 : 1975년의 법을 그대로 취한 것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개 또는 광고를 할 때에 프랑스어의 사용을 의무화한다. 특별한 유형의 제품으로 많은 대중이 알고 있는 외국어 명칭은 예외로 한다.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품을 소개할 때에도 프랑스어로 소개된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 ② 직업 세계 : 국제적으로 큰 규모의 기업이나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다양한 외국어의 사용을 내포하는 언어적 책략을 만들어내야 한다. 내부 의사 전달을 위한 언어와 외국 상대와의 의사 전달을 위한 언어를 구별해야 한다. 외국어를 잘하지 못한다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을 줄이고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프랑스어 사용의 범위를 넓힌다.
- ③ 교육 : 공립이나 사립 공히 교육 기관에서 시험, 선발 고사, 논문 등을 쓸 때에는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일부 특수 학교나 지방어 또는 지방 문화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특히 1995년 프랑스가 주도한 유럽 공동체 회의에서 공동체 국가는 다언어주의를 채택하여 교육 기관에서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외국어를 가르치도록 결정하였다.
- ④ 매체(미디어) : 프랑스어를 확산시키기 위해 미디어, 특히 텔레비전의 역할은 지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광고나 방송에는 프랑스어나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영화나 시청각 자료가 원본으로 되어 있는 것이나 외국어로 방송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 문화 행사나 외국어를 학습할 목적으로 제작된 자료는 예외로 인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고등 시청각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⑤ 시위, 학술 회의, 모임 :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된 사항인데 프랑스가 문화, 과학, 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회의를 유치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인데 많은 경우 영어로만 회의가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엄격하게 프랑스어의 사용을 적용할 경우 국제 회의의 개최 횟수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회의에서 프랑

스어의 사용이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심하다는 의견 사이에 타협점을 찾아 해결하였다. 그것은 프랑스 내에서 개최되는 회의에서 프랑스어권 출신의 사람은 프랑스어로 발표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에 프랑스어 설명이 병기되어야 한다는 것과 회의 후에 참가자에게 배포되는 자료에 적어도 프랑스어로 요약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⑥ 공공 봉사(서비스) 분야의 특별한 의무 : 교육제도나 매체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공공 봉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특별한 제한을 받는다. 이것은 그들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을 도덕적인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도덕적인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프랑스어로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단 하나의 예외가 인정되는데 프랑스 바깥에서 행해지는 공업이나 상업 활동에 관계되는 기관에 대해서이다. 프랑스 국내에서 출판되는 출판물의 경우에도 프랑스어로 된 요약 내용이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어 사용 관련법은 프랑스 국내에서 프랑스어의 사용이 의무적이라는 사항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용상으로 볼 때 이 법률은 다른 법률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 보호법이나 노동법, 고등 시청각 위원회법 등의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 법의 적용에 대한 보고서를 정부는 매년 9월 15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즉, 법률 사항에 대해 보완해야 할 사항과 과학 분야의 잡지 발간, 국제 회의에서의 동시 통역, 어휘의 용법을 풍요롭게 하기, 정보 사회에서의 다언어주의의 확산 등과 같은 일련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사항은 프랑스어 총괄 위원회의 인터넷 동지(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인들도 이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2) 아카데미 프랑세즈(Académie française)

1634년 리슐리외(Richelieu)에 의해 만들어진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이전에 있던 문인협회를 공식화한 것으로 프랑스어의 보호를 위해 설립된 가장 오래된 기관이다. 이 기관의 설립 목적은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위상과 규칙 제 24조에 이렇게 적혀 있다: “모든 노력을 기울여 프랑스어에 분명한 규칙을 제공하고 프랑스어를 통하여 순수하고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예술 및 과학 분야를 프랑스어로 다룰 수 있게 한다.”

이 기관의 설립 당시만 해도 프랑스어는 라틴어에 비해 어휘도 부족하였고 프랑스어의 문법 규칙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특히 철자가 결정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줄 기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오늘날에는 프랑스어의 어휘가 풍부해지고 문법에 관한 사항도 대부분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어 있기는 하나 그 위상과 규칙은 기관의 설립 이후 변화된 것이 거의 없다. 회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가져 프랑스어에 대한 논의를 하며 사전 편찬 작업을 진행시킨다. 아카데미 프랑세즈에서 편찬한 사전 제8판은 1935년에 출간되었으며 현재는 제9판을 준비하고 있다. 그 동안의 작업 결과를 제1권 소형 포켓판으로 출간하였으나 전체 작업은 앞으로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여겨진다. 기 출판된 제1권에는 1만6천5백 개의 어휘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새로운 어휘들이며 기존의 사전에 수록되어 있으나 현재 사용되지 않는 일부 어휘는 탈락되었다.

전통을 고수하는 아카데미 프랑세즈가 그렇다고 편협하지는 않다. 프랑스어권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도 수록하기로 결정하는가 하면, 복잡한 프랑스어 철자 체계를 간편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고 cottage, base-ball, barman, cow-boy, dancing, drugstore 등과 같은 영어 단어를 수록하여 프랑스어 사전에서 영어 단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

다는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3) 프랑스어 고등 자문회(Conseil supérieur de la langue française)

프랑스어 고등 자문회는 프랑스 대통령과 정부에 의해 결정된 틀 안에서 프랑스어에 대한 관찰, 연구, 자문 및 평가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프랑스어의 용법을 정리하고 어휘를 확장시키며 프랑스 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 프랑스어의 보급, 확대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외국어에 관련한 정책을 수립한다. 총리와 교육부장관, 프랑스어권(Francophonie) 담당 장관 등에 의해 제안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등 정책적인 활동도 한다.

프랑스어 고등 자문회는 임기 4년의 19 내지 25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프랑스어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지식과 연구 능력에 의해 선발된다. 총리가 회장이 되며 교육부 장관, 프랑스어 담당 장관, 아카데미 프랑세즈와 과학원 종신 사무총장, 용어와 신조어를 위한 위원회 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프랑스어 총괄 위원회(Délégation générale à la langue française)

행정부처 간의 용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리 직속으로 1966년 프랑스어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프랑스어 총괄 위원회는 그 후속 기관으로 1989년 6월 2일자 법령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1996년 이후에는 문화부에 소속되어 모든 행정부처 뿐만 아니라 공공 기관, 협회 등에 관련되는 언어 사항을 관찰, 협조, 격려, 종합하는 일을 담당한다. 특히 프랑스 국내와 유럽, 프랑스어권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프랑스어의 사용을 부

추기기 위해 외무부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프랑스어 총괄 위원회는 프랑스어 고등 자문회와의 협조로 프랑스어 사용 관련법의 적용 및 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 사항을 마련하여 위반시 이를 적발, 시정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프랑스어 사용 관련법을 적용하기 위한 처벌 조항을 1995년 3월에 마련하여 현재까지 4천 8백여 건이나 되는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였다. 위반 사례들은 상품 광고나 제품의 사용 설명서에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한 조항을 어긴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프랑스어의 올바른 용법을 위해 용어 관련 부처간 위원회(Commissions ministérielles de terminologie)에도 적극 참여한다. 이는 특히 경제,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프랑스어 표현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각 부처간 용어 위원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용어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부 부처에서 사용되는 특수 전문 용어가 다른 부처에서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며 그 용법이 일단 규정되면 일반인들도 관련 분야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프랑스어의 미래를 위해서 신조어와 새로운 기술 용어를 만들어내는 일에 관여한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프랑스어의 존재와 국제 조직으로서 프랑스어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프랑스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학술 회의에 동시 통역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든가 유럽 공동체 국가들에서 다언어주의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프랑스어가 국제적으로 널리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1995년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세계 프랑스어권 대회(Journée mondiale de la francophonie)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로의 프랑스어(le français comme on l’aime)”라는 기치를 내걸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었고, 대회의 성공에 힘입어 이 대회가 매년 개최되도록 결정했다. 올림픽과 같은 국제 모

임에서도 프랑스어가 제대로 쓰이도록 노력하는데 특히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대회에서 프랑스어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그 결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프랑스어 총괄 위원회는 프랑스어의 보급을 위해 언어의 다원화라는 가치를 내걸고 관련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유럽 연합 국가들이 2개의 외국어를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프랑스 정부의 언어 정책은 우리에게 구체적이며 다원적인 언어 정책의 수립을 추구하여야 할 것을 시사하여 준다. 그것은 곧 국어 수호의 법적 기반 조성, 아카데미 프랑세즈나 프랑스어 고등자문회와 같은 국어 원로 자문 기구의 활성화, 프랑스 총괄위원회와 같은 총리 직속 국어 정책 기구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이는 현재의 국어심의회, 국어정책과, 국어연구원의 위상을 적절히 재정립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면 앞으로 21 세기에 직면한 언어 규범의 문제는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4. 언어 규범의 개념

언어 규범이라 하면 흔히 단어 표기를 위한 표기 4법(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가리킨다. 언어 규범의 개념을 넓혀 본다면 '문법'도 언어 규범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4 표기 규정들은 성문화한 표기법 규정이 있지만, 문법 규범은 한국인 토박이 화자에게 내재적, 추상적 규범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그것을 지식으로 기술한 문법서들이 있는 정도일 뿐이고 그 책들도 단순히 국

어 지식의 설명서에 불과하며 문장 작성법과 같은 언어 사용 규범을 목적으로 서술한 것은 아니라 문법 규범은 다소 성립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그 동안 언어 규범이라 하면 단어 차원에서 4 표기법 규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고 대학의 강좌에서도 ‘국어 정서법’이란 강좌가 이러한 4 표기법 중심의 강의를 베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실정이다.

그런데 이 단어 차원의 4 표기법 규범도 더욱 보완하고 정비할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규범이 단어 차원에만 갇혀 있는 것은 문제이다. 정작 단어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문장의 규범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범서가 없어 국어 문장 교육에 애로가 많다. 오늘날 국민의 문장력이나 표현력에 문제가 많은 이유도 현행 문법 교과서는 작문이나 화법 교육과 연계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국민의 문장과 담화 능력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문장의 규범을 보여 주는 문법 규범이 국어 구조 지식의 설명서 수준을 넘어 ‘문법적 문장 작법 지침서’로서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학의 ‘국어 정서법’이라는 강좌도 쓰기 규범 즉 글말의 규범은 물론 말하기에서 나타나는 입말의 오용을 예방할 수 있는 입말의 규범까지 포함하도록 ‘국어 규범론’과 같은 명칭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는 언어 규범을 다음과 같이 글말과 입말이라는 언어 유형에 따른 규범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뜻이 된다.

언어 유형에 따른 언어 규범의 개념

- ① 글말의 규범: 글말에 나타나는 모든 규범 문제
- ② 입말의 규범: 입말에 나타나는 모든 규범 문제

그 동안의 언어 규범 연구는 주로 글말 규범에 집중되었고 입말과 글말의 차이에 따른 규범의 차이와 입말의 규범을 부각시킨 논의가 많지 않

있다. 입말 규범 연구로 기억할 만한 것은 국립국어연구원이 조선일보와 공동 기획으로 만들었던 '표준 화법'(1992)에서 친족 호칭어나 지칭어와 같은 입말 규범을 다룬 것을 들 수 있다. 규범은 좁은 개념과 넓은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규범의 개념

- ① 좁은 개념: 단어 차원에서 바른 표기(맞춤법, spelling) 문제만을 다룬다. 흔히 4 표기법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대중적 인식이 그러하다.
- ② 넓은 개념: 바른 발음법(正音法), 바른 단어 사용법(正語法), 바른 문장 작성법(正文法), 바른 대화 능력(正話法), 바른 문체 구성 능력(正體法)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언어 단위의 관점에서는 다음 ①-③에서처럼 단어-문장-담화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들 규범과 국어 사용 능력이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관련지어 표시하여 본다.

언어 단위에 따른 규범의 개념

- ① 단어 규범(단어법) → 어휘력
 - ㄱ. 단어의 형식(표기): 맞춤법 등 표기 규정에 맞아야 한다. => 표기 규범 → 표기력(발음): 단어의 바른 발음을 말한다. => 발음 규범 → 발음력
 - ㄴ. 단어의 내용: 바르고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어휘 규범 → 어휘력
- ② 문장 규범(문장법) → 문장력
 - ㄱ. 문장의 형식: 단어뿐만이 아니라 문장도 높임법, 主述 관계 호응, 문체 등이 국어 문법 원리에 맞아야 한다. => 문법 규범 → 문장 구조력(=문법력)
 - ㄴ. 문장의 내용: 지식의 정확성과 문장의 논리성, 조리성, 표현의 수

사성 등의 문제가 관계된다. => 표현 규범 → 문장 표현력

③ 담화 규범(담화법) → 담화력

- ㄱ. 담화의 형식: 담화의 발음(어조, 성량, 음색 등), 담화 태도, 담화량,
담화 구조의 형식 문제 → 담화 구조력
- ㄴ. 담화의 내용: 담화 표현의 적절성, 수사법, 설득력 등 내용의 질
문제 → 담화 표현력

이상에 따르면 언어 규범은 언어 유형별로는 글말 규범과 입말 규범으로 나뉘며 언어 단위별로는 단어 규범, 문장 규범, 담화 규범으로 구성되어 이들을 세분하면 여섯 가지 유형으로까지 나눌 수 있을 만큼 복잡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면 그 동안 국어연구원에서 해 온 규범 연구들이 단어 규범이나 문장 규범에 치우쳤고 담화 규범의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앞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규범 영역을 이렇게 6개 영역으로 정립하면 국어연구원에서 연구할 규범 영역의 과제도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고 하겠다.

아울러 우리는 규범 연구를 하려면 규범 언어와 비규범 언어를 구별할 근거가 되는 언어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말뭉치(corpus)를 구축하여 언어 자료의 실태를 먼저 조사하는 연구가 있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는 언어 규범 연구란 역설적으로 규범 언어의 변이형(variants)들 - 인종, 지역, 계층, 세대, 성별 등의 5대 요인에 따른 사회언어학적 변이형들로 대체로 비규범 언어형들 - 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언어 규범의 연구는 비규범 언어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언어 규범 연구는 기존 규정 몇 가지를 금과옥조로 유

지하려는 보수적 태도가 아니라 언어의 다양한 실상을 연구하려는 사회언어학적 연구와 이들을 계량 분석하는 계량언어학적 연구가 활발히 공조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1948년에 창립한 일본 국립국어연구소가 그동안 사회언어학적 연구와 계량언어학적 연구의 전통을 착실히 쌓아온 것은 귀감이 된다. 다음에 제시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일본 국어연구소에서 연구된 것들로 앞으로 국어연구원에서 규범 연구의 기초 연구로 추진할 만한 것이다.

규범 연구의 기초 연구

- ① 단어 차원 연구: 국어의 기본 어휘 연구, 동의어·계층어·세대어(유아어·청소년어·노인어), 전문어·연상어 연구, 잡지 용어 변천 연구, 품사별 어휘 연구, 분류 어휘 연구, 외래어 실태 연구, 국어 발음 연구, 오용 표기 실태, 방언 어휘 연구 등
- ② 문장 차원 연구: 문형 연구, 문맥과 문장의 상관성, 문장과 문단 연구, 오용 문장 실태, 현대 문법 연구, 방언 문법 연구 등
- ③ 담화 차원 연구: 언어 생활 실태, 담화 언어의 실태, 담화 행동의 양상, 오용 담화 실태, 담화와 문화의 상관성 연구 등

언어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위와 같은 기초 연구들이 이루어지면 규범의 모형들이 수립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용 사전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며 이런 사전들은 규범적 가치를 부여받게 되어 규범 연구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언어 자료 구축 → 언어 실태 연구 → 규범 작성 → 규범 사전 개발

이제 우리는 이것을 다시 새롭게 거시적 정책 과제와 미시적 정책 과제로 나누어 보도록 한다.

4. 거시적 규범 정책 과제

대체로 우리는 국어연구원에서 다음의 정책 과제들을 연구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4.1. 국어 사용법의 제정 - 세계화 시대를 대비한 국어 관련 법규의 정비

앞으로 영어가 거세게 지배하고 소수 민족어들이 소멸하는 언어 생태학적 위기 시대,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영어의 언어 침략이 거세게 몰아치는 언어 제국주의(linguistic imperialism) 시대를 맞아 한국어의 운명도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 더욱이 영어 공용어화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우국적이며 몽상적인 일부 신판 사대주의 지식인들, 영어 교육 강화와 영어 공용어화의 방법론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대중 집단이 존재하는 속에서 한국어의 앞날은 영어와 한국어의 잡탕말로 변한 영어 피진어의 하나로 변할 조짐이 보이고 있기에 이런 우려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문화 전쟁 시대란 곧 언어 전쟁 시대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 나라에서 세계화, 조기 영어 교육의 열풍이 불면서 국어와 영어의 소리 없는 전투가 방송에서, 거리 간판에서³⁾, 학교 강단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원래 세계화는 외래 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하고 재창조하는 것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여야 한다. 그리하여 인류의 다양한 문화가 존중받고 공존하는 즉, 다원적 문

3) 최근 이루어진 간판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간판 상호의 약 56%가 외래어 간판임이 드러났다(이석주 외 2000 예정).

화가 인정받는 다원적 세계주의(多元的 世界主義)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변에 유포된 세계화는 미국 문화로 대표되는 영어 문화의 일방적 수용에만 급급한 상황이라 우리 나라는 상업주의와 패권 의식이 깔린 패권적 세계주의(霸權的 世界主義)의 각축장이 되어 가고 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진정한 세계화란 전세계 모든 나라의 다양한 언어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향과 우리의 문화를 다양한 전세계 언어로 소개하고 널리 알리는 방향이 균형을 맞추며 활발할 때 상호적 세계화가 달성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영어 학습에만 치중한 요즘의 추세는 분명 잘못된 방향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서구 열강들은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후진국, 약소국들에 대해 문명화, 근대화 등을 빙자하여 식민지로 만들어 원주민 지도층과 자제를 자국에 유학시켜 서구인화하여 서구의 앞잡이로 만들고 나아가 원주민 언어와 문화를 파괴해 온 경험에 있어 서구인들이 화려하게 제시하는 세계주의의 언어 수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복고일 씨와 같은 영어 공용어론자들의 주장을 보면 영어의 세계 제패를 기정 사실화하고 세계화를 영어 배우기로 착각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 제국주의 특히 영어 제국주의의 파괴적 위험성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미국화의 급행열차에 빨리 올라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언어 제국주의의 위험성에 무지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언어 제국주의의 역사와 영어 제국주의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미 필립슨(Robert Phillipson 1992), 페니쿠크(Alastair Pennycook 1994) 같은 서구 학자들의 논저가 언어 제국주의의 역사와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1990년대 초부터 영어 제국주의의 위협을 눈치채고 영어 제국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현재는 일본 내에서도 영어 공용어화론에 대해 반대가 대부분인데 이들은 대체로 일본어의 국익을 지키고 일본어의 국제화를 추구하는 소위 일본 민족주의 관점에서 접근

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근대 이래 냉전 시대까지 지속된 정치, 경제적 제국주의 침략 시기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강대국들은 정치, 경제적 침략을 문화제국주의, 언어 제국주의 형태의 위장술을 통하여 추구하고 있다고 볼 때 대상 국가의 정신을 송두리째 앗아가게 되는 언어와 문화를 통한 침략에 대해서는 이 시대 지식인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식민지 침략이 물질 침략 위주이었고 피식민지 주민의 정신을 침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면 오늘의 문화 침략은 민족의 핵심 요소인 언어와 정신 문화부터 공략하는 것이라 민족 파괴력이 가공할 만하므로 더욱 경계하여야 한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언어 정책은 거시적으로 국어 수호의 정신을 선언적으로 담은 법을 제정하여 ‘국어 사용법’(가칭)과 같은 법을 법제화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의 국어 관련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한글전용법 6호>(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1948. 10. 9)

<문화 예술 진흥법>(제2장 국어의 발전 및 보급)(1995. 1. 5)

<문화 예술 진흥법 시행령>(제3장 국어의 발전 및 보급. 4장 국어심의회)(1996. 3. 30 개정)

<사무관리규정>제10조. 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가로로 쓴다.(1994. 7. 23 개정)

<옥외광고물등관리법>(1992. 12. 8 개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4장 표시 방법 제13조(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 방법)>

①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맞춤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

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개정 1993. 2. 24)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1995. 7. 20 개정)

<도로 표지 규칙>(건설부령 487호, 1991. 6. 10 제정)

<호적법>(1995. 12. 6 개정)

<호적법 시행 규칙>(1995. 6. 5 개정)

위와 같은 국어 사용 관련 법률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효과는 의문시된다. 따라서 국어 사용법, 또는 국어 애호법으로 부를 수 있는 강력한 법안으로 통합하고 국내외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다.

- ① 국어 사랑의 정신
- ② 국어 애호에 대한 국민의 의무
- ③ 관공서에서 나오는 공문서 표기의 의무 사항
- ④ 외래 학문 용어의 번역 의무
- ⑤ 외국 노동자 계약서의 두 언어(한국어와 노동자 모국어) 사용 의무
- ⑥ 문자, 영상물의 국어 사용 의무화, 외래어 사용시 번역어 병기 의무화
- ⑦ 광고물의 국어 사용 의무 사항
- ⑧ 기업 상호명, 상품명의 국어 사용 의무 사항
- ⑨ 언론의 국어 사용 관련 준수 사항

이러한 법안은 전술한 프랑스의 ‘불어 사용법’(1994)을 모방한 것으로 중지를 모으다면 이보다 더 실천적 내용을 담은 우수한 법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4.2. 국어 통일 규범 제정

21 세기 규범 정책으로 두 번째이자 실질적으로 최우선 사업 과제는 남북 통일 시대를 대비한 통일 규범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일이다.

그 동안 남북 언어의 비교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졌는데 정작 통일을 대비한 구체적인 남북 언어 통합 방안이나 남북 언어 규범 통일 방안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언어 규범이란 것이 협상으로 해결되느냐의 문제이다. 과거에 로마자 표기법 협상이 파리에서 남북간에 진행되었지만 평행선을 긋고 끝난 경험이 있음을 생각할 때 언어 규범의 협상이란 원천적으로 타협 공론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어 현상이란 것이 대중의 선택과 동의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대중의 언어 선택은 대체로 경제적 동기가 좌우하는 것이라 흡수 통일을 전제로 한다면 언어 규범의 협상은 무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흡수 통일의 비용 부담도 엄청남을 생각하면 남북 연합 체제로 지속하다가 한 세대쯤 뒤에 상호간에 국가 경제력이 대등해진 후에 자연스런 남북 통합을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언어 규범 협상이 어느 정도 예상될 수 있다. 그 어떤 경우이든 국어연구원은 남북 통합의 정치적 실험에 따라 예상되는 언어 통합과 규범 통합의 문제를 다각도로 연구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남북 언어와 규범 대비 연구를 정리하고 통합의 이상적인 모형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어떤 정치 협상에도 좌우되지 않고 남북 국어학자들이 언어학적 양심으로 통합 규범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남북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대전제 하에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 발음법, 사전 배치 자모 순서 등에서 대 타협을 이루어 정치 체제 통일에

앞서 규범 통일부터 추진하도록 끊임없이 설득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남북 언어 규범 통일 사업이야말로 국어연구원의 가장 절실한 존재 이유가 된다. 그 동안 국어연구원은 표준국어대사전을 편찬하면서 남북 언어 대비의 기초 자료를 축적해 놓았으므로 이제는 남북 통합시 예상되는 다양한 상황을 대비하여 사회언어학적 관점이나 정치 및 경제언어학적 관점에서의 구체적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남북 정치 체제의 통합 과정에서 경제, 사회의 모든 부문은 우세 문화로 흡수되기 마련이다. 동·서독의 사례에서도 드러나듯 언어 영역에서도 살아남는 북한어는 별로 없을 것이다. 더욱이 서울말 사용이 성공의 한 조건이라고 할 때 북한 동포들도 서울말을 배우고자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북한어 사용이 불이익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런 점에서는 남북 통합을 위해서도 방송, 신문, 교육 제도를 통한 표준어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남북 어문 규범 계몽 교육에 상호 협조하여야 하는데 ‘남북 대역어’ 사전도 준비하고 교과서 편찬시는 남한식 국어 교과서 옆에 북한식 전문 용어나 북한 방언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 대역어 사전이나 교과서 편찬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교과별 전문 용어 대역 자료집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는 귀순 지식인이 한자어조차 남한 한자어를 못 알아차리겠다고 지적한 데서 드러난다(정종남 1999, 2000).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북한 사전에 실려 있다고 해도 생활어가 아니라 사전에 등재된 지식어에 불과하므로 북한 사전에 나오느냐 여부는 무의미하다. 가령 ‘홍보’라는 단어는 북한 사전에 나오지만 북한의 생활어가 아니므로 북한 주민에게는 남한의 ‘홍보’를 알아차릴 수 없다. 이 점에서는 귀순자들의 언어 부적응 갈등 사례에 대한 인터뷰를 통한 조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4.3. 표기 규범의 지속적 정비

전술한 대로 표기 4법은 완벽히 만들고 미비점은 보완하여야 한다. 한글 맞춤법의 경우 현행 규정은 1997년 2월 - 12월까지 국어연구원의 어문 규범 연구소위원회에서 30회에 걸쳐 심도 있는 분석을 한 바 있었는데 그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규범의 내용이나 용어 사용, 문구, 용례 제시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국어심의회에까지 개정안이 상정된 바 있으나 출판협회 등의 반발과 선거를 앞둔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보류된 바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5항의 미시 과제(微視 課題)에서 자세히 다룬다.

4.4. 국어 교육 및 한국어 교육용 문법 규범의 표준화

현행 학교 문법은 1963년의 ‘학교문법통일안’의 출발을 시작으로 1985년의 국정 단일 문법 교과서 시대를 거쳐 오늘날 7차 교육과정의 문법 교과서 개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인 화자에 내재하여 있는 국어 내재 문법의 국어 구조 지식을 불완전하게나마 기술한 것에 불과하고 문법 교육이 국어 사용 능력 향상에 별로 기여한 바 없다는 비판과 언어 및 문법 교육 방법의 변화로 서구에서도 문법 교육은 위기이자 변혁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라도 국어 문법의 구조 기술에 대한 연구는 지속될 것이므로 학문 문법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제된 학교 문법 즉 교육용 표준 문법을 상세히 확립하여야 문법 교육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실용적인 문장 규범으로서의 문법 규범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의 내용을 보면 한국어 학습

서나 한국어교육용 문법서라고 나온 것들이 문법 번역 용어들도 교재마다 제각각이라(줄고 2000 참고)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한국어 교육용 문법 내용의 표준화와 통일도 한국어세계화 사업에 발맞추어 국어연구원에서 주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표준 문법의 심화 발전을 위하여서는 말뭉치 기반 문법 연구(corpus-based grammatical study)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말뭉치 기반 문법은 양질의 말뭉치 자료를 구축하고 그에 기반한 국어 자료의 실상을 파악하여 그에 기반한 국어 문법 기술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이의 모형으로는 롱맨출판사에서 나온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를 들 수 있다. 이 문법서는 롱맨에서 구축한 말뭉치를 기반으로 영어의 사용 빈도 실태를 각종 도표로 제시하고 그에 기반한 문법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구축한 말뭉치는 네 유형의 자료를 구축하고 있어⁴⁾ 앞으로 국어연구원도 이와 같은 방법론에 입각한 양질(良質)의 말뭉치를 구축하여 말뭉치 기반 문법 연구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하며 그에 바탕한 문법 기술을 하여야 할 것이다.

4.5. 규범 교육 부문

어문 정책을 문화부에서 관장하다 보니 교육부의 언어 규범 교육 영역

4) 이들의 말뭉치 자료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회화어(conv)	이야기어(fic)	뉴스(news)	학문어(acad)
[양 식]	입말	글말	글말	글말
	(+입말체 대화 포함)			
[목 적]	개인 대화	취미 독서	정보, 평가	정보, 논술, 설명체
[청 중]	개인	다중	다중	전문가
[언어권]	지역적	전세계적	지역, 국가적	전세계적

따라서 양질의 균질 말뭉치가 되려면 위 자료를 고르게 구축하여야 한다.

과의 괴리가 생기기 쉬우므로 상호 유기적 협조가 쉽다. 단적으로 국어 정책과와 국어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교육과정상 국민 공교육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반영하고 관련 정부 부처끼리도 협조하는 유기적 장치가 필요하다.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는 규범에 밝은 교열 전문가가 교열하도록 교과서 교열 과정의 의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어 연구원에서 언론이나 출판 기구와 협의하여 교열 전문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범의 대민 계몽을 위해서도 교사 교육과 공무원 교육에서 어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6. 사전 개정 사업 지속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시 존재하였던 사전 편찬실은 1999년 말로 해체하였지만 사전 보완 사업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축적된 사전 편찬 사업의 경험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법 규범의 통일 사업을 바탕으로 21 세기 국어 문화가 최고의 사전 편찬 기술 위에 이룩되도록 국어연구원이 선도적 핵심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세종의 한글 창제 정신을 계승하고 21 세기 문화 전쟁 시대에 국어 문화를 선도하는 기본이 될 것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국어 사전 하나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더욱 정제된 한국어 사전이 학습자 요구별로 다양하게 나오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권위 있는 국어 사전이 필요한 바 사전 보완 작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더욱이 국어 사전이 규범 효과를 발하고 있는 미국식 자율 언어 정책 방식은 장기적으로 우리도 표준국어사전의 규범화를 통하여 실행할 바이므로 사전 편찬 및 그 연구는 국어 규범의 표준화를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보여 줄 부문이라 하겠다.

특히 이 사전 개정 작업은 비용 절약을 위해 온라인상에서 전국민을 상대로 국어 사전 교정 제안을 받도록 하고 표제어와 내용 정보 수정 제안들에 대한 심의를 정례화하여야 한다.

또한 사전의 뜻풀이가 정확하여 규범 기술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사전들을 보면 단어 뜻풀이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이런 모호함을 해결하고 정확한 뜻풀이를 제시하는 일도 국어 규범화 작업에서 선행해야 한다. 가령 ‘이전, 이후’의 뜻과 그 쓰임새를 보자.

‘이상’과 ‘이하’는 수학에서 해당 숫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기로 했으므로 일상 생활에서도 그에 따라 쓰고 있다. 그런데 ‘이전, 이후’는 그렇지 못하다. 가령 ‘조선 시대 이전, 조선 시대 이후’라고 할 때에 조선 시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아닌지가 언중의 의견이 다르다. 즉 ‘조선 시대 이전’은 조선 시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포함하지 않는 개념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 혼란스럽다. ‘조선 시대 이후’라고 할 때도 조선을 포함하는 여부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 심지어 국어학자들도 의견이 다르다. 만일 어떤 두 사람이 ‘20일 이전까지 잔금을 치른다’라는 약속을 계약서에 명기했을 때 한 사람은 19일까지로 알고 한 사람은 20일까지로 알아 해석이 다르다면 분쟁도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단어 의미의 정확한 표준화도 중요하다.

빈도를 조사하여 보면 ‘X 이전’이라 하면 X를 포함하지 않고 ‘X 이후’라 하면 X를 포함하는 것으로 답하는 경우가 많아 ‘이전’과 ‘이후’라는 반대어가 그 의미 영역 해석은 ‘이상, 이하’처럼 일관된 규칙성을 보이지 않는다.

흔히 표준어 사정은 서울말과 방언형과의 대비 조사만 충실히 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대다수의 단어 뜻풀이가 애매모호하거나 현실과 달리 쓰이는 것이 많아 단어들의 표준 의미를 확립하고 어휘 교육에 반영하는 것이 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매무새-매

무시, 실랑이-승강이, 애꿎다-애꿎다-애타다, 홀몸-홀몸, 잇따르다-잇달다, 물매-뭇매-몰매, 불호령-불호령, 일채-일절, 신문(訊問)-심문(審問), 주비(籌備)-준비(準備)...’ 등을 보면 이들 각 단어가 무엇인가 다른 뜻이 있거나 용법이 있는 것인 양 구별해 놓았고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기도 하고 법조계, 정치계 등의 특정 집단에서는 변별해 쓰기도 하지만 언중들의 사용과 이해 정도의 실상을 보면 변별되지 않고 쓰이며 언중들이 이해하여 준수하기는 어려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동의어 처리로 뜻풀이를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다음 예가 그러한 예이다.

- ① 매무새: 옷을 입은 맵시. = 옷매무새. ~가 곱다, ~가 단정하다.
매무시: 옷을 입을 때 매고 여미는 뒧단속. = 옷매무시. ~를 가다듬다.
맵시: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양새. ~가 나다.
- ② 애꿎다: 몹시 슬퍼서 창자가 끊어질 듯하다
애꿎다: 몹시 답답하거나 안타까워 속이 끊는 듯하다 = 애타다

그 밖에 사전 뜻풀이에 쓰이는 용어나 설명 방식도 불균형한 것이 많아 표준어 연구는 사전학, 어휘 교육과 관련지어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야 한다.

4.7. 외래 전문용어 번역 의무화

오늘날 우리 학문의 글쓰기가 외래어 범람, 서구식 글쓰기 방식으로 인해 학문적 독립이 어려운데 앞으로 국어연구원은 시중에 유입되는 각종 학문 용어는 즉각 번역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외래어를 남용하고 외래어 번역에 게을러 학문의 주체적 발전을 막고 대외 종속을 심화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학문 풍토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당 전공 학문

종사자들의 학문 행위와 글쓰기 행위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으로 학문 전문용어의 즉시 번역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언어 규범의 정비도 전술한 프랑스어 총괄위원회의 역할과 같은 것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학문 용어뿐만 아니라 일반 외래어들도 ‘워크아웃→기업 구조 개선, 글로벌리즘→세계주의(지구주의), 뉴미디어→신매체, 더빙→재녹음(재녹화), 덤핑→혈값(막팔기), 비주얼마케팅→진열 판매, 러닝메이트→동반 후보, 로열 박스→귀빈석, 레임덕 현상→권력 누수 현상, 머니론더링→돈세탁, 바코드→막대표(줄표)’ 등처럼 즉각 번역 차용어를 보급하고 습관화하면 된다. 이들 번역어가 처음에는 다소 어색할지라도 번역어로 만들어 씹으로써 원어와 국어의 대조 학습을 하는 것이 개인의 어휘력(語彙力) 확장은 물론 국어의 조어력(造語力) 확장에도 유익하다.

이러한 외래 용어의 번역을 활성화하려면 현재 과학용어를 중심으로 전문용어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과학기술원 산하 ‘전문용어 언어공학 연구센터’의 역할은 전문용어의 번역 연구에도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규범 영역에서 살펴볼 거시 과제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위 영역별로 앞으로의 미시적 과제를 간단히 살펴본다.

5. 미시적 규범 정책 과제

주요 어문 규범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

5) 이 부분은 졸저(1999)의 논의를 주로 정리하였다.

5.1. 발음 규범

현대 한국어 발음 규범을 위해서는 표준어 규정 제2부 표준 발음법이 있어 규범 교육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규정에는 다음 문제가 있다.

규정의 보완

(1) 5항의 다만 2에서 “예, 레’ 이외의 ㄹ는 [ㄹ]로도 발음한다”라고 했는데 ‘레’도 ‘사례[사례/사례], 관례[괄례/괄례]’의 경우처럼 [ㄹ]로 발음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으므로 이 규정은 ‘레’를 빼고 “예’ 이외의 ㄹ는...”으로 했어야 한다.

(2) 5항 다만 4의 ‘강의의’의 발음을 [강:의의/강:이에]만 제시했는데 본문에 [강:이의/강:의에]도 더 추가했어야 한다.

(3) 22항에는 ‘-어’를 [-어/-여]의 두 가지로 발음하는 경우에 ‘되어[되어/되여], 피어[피어/피여]’의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같은 구조의 ‘기어, 개어, 데어, 띄어, 티어, 씌어’도 [-여]로 발음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명시적 언급이 없다. 따라서 규정을 만들 때 용례항을 들 때는 다른 용례는 배제하는 절대 용례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기술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한다. 이 규정의 경우 자연스러운 ㅁ모음동화를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일 유형어는 모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소리의 길이 문제

소리의 길이는 표준 발음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유어에서나 한자어에서 장단 현상이 소멸되고 있어 그야말로 사문화한 규정이 되고 있다. 표준 발음법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되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상으로는 이러이러하게 발음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지켜지지도 않고 있고 장단 현상의 음운론적 규칙성이 없이 단어 형태마다 불규칙한 상황이라 개인의 경험칙에 의거한 실정이다. 학교 교사들부터 ‘소멸되어 가는 장단 현상을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 ‘국민의 언어 실생활에 맞지 않은 표준 발음법은 누구를 위한 발음법인가?’라며 반문한다. 그렇다고 완전히 폐지하기도 어려운 규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범 교육의 역할은 자명하다. 잘 지켜지지 않지만 발음 순화 차원에서 발음 교육을 일정하게 환기시켜 주는 역할을 학교의 발음 교육은 하여야 하며 국어연구원은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실로 언어의 처방주의(prescriptivism) 태도와 기술주의(descriptivism) 태도 속에서 보수(규범언어)와 진보(현실언어)의 양 축을 조화시키는 노력을 우리 모두 게을리 말아야 한다.

5.2. 한글 맞춤법

(1) 어종에 따른 까다로움의 예

몇 가지 맞춤법이 어종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가령 ‘-난, -란(欄)’의 표기가 ‘어린이난, 어머니난, 가십난, 스포츠난’처럼 고유어종이면 ‘-난’이고 ‘비고란, 문예란’처럼 한자어이면 ‘-란’으로 하였는데 까다롭다.

‘이탈리아 인, 프랑스 어’처럼 외래어가 붙은 경우 띄게 한 것도 표기의 시각적 일관성을 생각한다면 까다롭다.

‘전셋집-전세방-셋방’의 경우는 88년 규정에서 ‘전셋집’은 한자어+고유어의 구조라 ㅅ이 붙고 ‘전세방’은 한자어에 붙이지 않는 대원칙에 따라 붙이지 않으며 ‘셋방’은 그것의 예외인 여섯 한자어 목록이라 ㅅ이 붙는데 고유어, 한자어라는 어종에 따라 규정을 만들다 보니 이런 까다로움이

생긴다.

(2) ㄹ 탈락 용언의 준말

한글 맞춤법 18항에서 준 대로 적는다고 하여 마치 원말은 안 되는 것처럼 하였다. 그래서 ‘멀지 않아> 머지않아’로 한다고 해설란에 나오고 ‘말다’도 다음 예를 들고 있다. 그런데 ‘멀지 않아’는 표준판 사전에서도 시간 개념으로는 인정하지 않아 수궁할 수 있으나 다음 예는 원말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

①가지 말아>가지 마 ②가지 말아라>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는 입말이나 글말에서도 잘 쓰이기에 무조건 ‘가지 마라’로만 쓰라고 함은 재고해야 한다. 둘 다 본말, 준말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①은 해체, ②는 해라체이며 여기에 하라체인 ‘③가지 말라’도 추가할 수 있다.

(3) ‘부수다’는 ‘-어지다’와 결합하면 ‘부수어지다 > 부쉬지다’로 해야 하는데 실제 사전들에는 ‘부서지다’로 실려 있다. 발음 편리 때문으로 보이지만 ‘부쉬 > 부서’만 ㄷ 탈락을 반영해야 할 적극적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쉬’ 발음이 한국인이 발음하기에 아직 불가능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4) 사잇소리

사이ㅅ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환경의 표기 혼란이 있다. 가령, ‘머리말, 인사말, 존댓말, 혼잣말’은 음운 환경이 같아도 발음차 때문에 표기를 구별하는데 ‘머리말, 인사말’도 상당수 사람이 [머린말, 인산말]로 하는 경

향 때문에 ㅅ을 적으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사이ㅅ을 허용하다 보면 ‘수돗물, 전깃불, 출셋길, 나룻과, 절댓값, 최솟값, 등교길, 휴갓길, 자줏빛...’처럼 ㅅ을 적을 일이 너무 많아 ‘ㅅ’과 같은 이상한 표기도 나타난다. 이들은 동음어도 없고 혼란 우려도 없으므로 ㅅ이 없어도 단어 인지에 어려움이 전혀 없다.

(5) 용언 활용의 준말

준말 용언은 활용시 모음 어미가 오는 경우[아래 (모)의 경우]를 불허하도록 되었다. 가령 ‘머무르다=머물다’에서 ‘머무르다’는 ㄹ 불규칙 활용어이고 ‘머물다’는 ㄴ탈락 용언이되 ‘머물다’의 활용은 모음 어미의 경우를 불허한다. ‘가지다-갖다’도 마찬가지다.

-다 (자)	가지다	갖다	머무르다	머물다
-고 (〃)	가지고	갖고	머무르고	머물고
-으면(모)	가지면	갖으면*	머무르면	머물면*
-으니(〃)	가지니	갖으니*	머무르니	머무니*
-어 (〃)	가지어=가져	갖어*	머물러	머물어*
-은 (〃)	가진	갖은*	머무른	머문*
-을 (〃)	가질	갖을*	머무를	머물*
-는 (자)	가지는	갖는	머무르는	머무는
-음 (모)	가짐	갖음*	머무름	머뭇*

그러나 ‘갖다, 머물다’를 위 * 표의 경우처럼 모음 어미가 온 경우(소위 매개모음 ‘으’가 오는 경우도 포함)를 불허함은 너무 까다롭다. 가령, ‘갖다’는 모든 활용형이 되는데 비슷한 음운 환경인 ‘갖다’는 준말이라서 일부 활용형을 불허한다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심스럽다. 특히 ‘갖-, 머물-’ 뒤에 오는 관형형 어미 중에 자음 시작 어미인 ‘-는’이 오면 허용하고 모

음 시작 어미인 ‘-은, -을’이 오면 불허함은 같은 관형형인데 음운 요인으로 제한하여 번거롭다. 따라서 모음 어미 앞 활용 제약을 제거하고 쌍형을 허용하는 쪽으로 개선함이 좋을 것이다.

(6) 용어 사용의 문제

한글 맞춤법 제32항에서 “단어의 끝 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준대로 적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단어의”는 제시한 용례 중에 명사만을 가리키기에 적합할 뿐이라서 “단어나 어간의”로 고쳐 ‘가지고, 가지지’처럼 용언의 경우도 포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즉, “단어의 끝 모음이...”라고만 하면 규정에서 제시한 ‘가지고, 가지지’와 같은 용언 어간의 경우 단어의 끝모음은 ‘-고, -지’의 ‘ㄱ’나 ‘ㅣ’가 되며 이들은 결코 줄어드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가지고, 가지지’에서 줄어드는 현상은 단어의 끝이 아니라 어간의 끝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7) 띄어쓰기

배우고 익히기 쉽다는 한글 맞춤법에서 띄어쓰기야말로 한글 운용을 어렵게 만드는 부담스런 존재가 아닐 수 없다. 구와 복합어의 구별이 난망한 언어학적 현실에서 복합어의 띄어쓰기 기준이 불확실한 것이 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이기에 국어의 띄어쓰기 규정이 완벽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까다로운 예로 교육부에서 고시한 ‘한글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를 보면 표제어 명사 ‘띄어쓰기’는 붙여 썼는데 동사 ‘띄어 쓰다’는 띄어 써서 대중들은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띄어쓰기’를 복합명사로 보아 붙여 썼다면 ‘띄어 쓰다’도 복합동사로 처리하여 붙여씀이 좋을 듯 싶기 때문이다. ‘붙여쓰기, 붙여 쓰다’도 마찬가지이다.

제43항에서도 순서나 숫자를 쓴 경우는 붙여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순서나 숫자를 쓴 경우만 붙여 쓸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한 예외 조항들이

띄어쓰기의 혼란을 초래한다.

그러면 띄어쓰기는 필요한가? 우리는 과거에도 붙여쓰기 문화 속에서 살아왔고 중, 일 문화권은 여전히 붙여쓰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고도의 독서, 출판 문화를 누리고 있거니와 우리의 띄어쓰기의 혼란은 오히려 띄어쓰기 절대론에 따르다 보니 띄어쓰기 규정이 분석주의에 홀려 각종 세부 규정과 예외를 낳아 어려움을 주고 있으므로 가급적 편리한 띄어쓰기를 위해서는 붙여쓰기를 많이 허용하는 쪽으로 발전해야 한다. 전문용어의 경우 무조건 붙여 씀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도 그렇게 함이 좋을 것이다.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이 이 방식을 택하였는데 아무 불편이 없다.

그 밖에 현행 교과서인 <고교 국어(상,하)>권에서 '기고 만장, 패가 망신, 관혼 상제'처럼 사자 성어의 띄어쓰기는 일관성도 없다.

(8) 어미 표기

규정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다음의 현행 어미 표기도 일관성이 없다.

*표 형태가 불인정되고 있는 형태이다.

	이어적기(연철)	끊어적기(분철)
-려면	-려며는*	-려면은
-면	-며는*	-면은
-지만	-지마는	-지만은*
-련만	-련마는	-련만은*
-나만	-나마는	-나만은*

즉, 어미에 '-은/는'이 붙어 어미화한 융합형이 때에 따라 연철형, 분철형으로 일관성 없이 쓰인다. '-건대, -관데'도 구별이 어렵고 '-르게'도 큰

탈락형 ‘가게, 오께’가 잘 쓰이는 것을 본다면 ‘-크께’로 했던 과거의 선택이 합리적이었다.

(9) 파생부사 ‘-이/히’ 규정

‘-이/히’ 규정은 “분명히 ‘이’로만 나면 ‘-이’로 적고, ‘히’로만 나면 ‘-히’로 적으며 ‘이’나 ‘히’로 나면 ‘-히’로 적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발음이 분명히 ‘-이’로 나는 것, ‘-히’로 나는 것, ‘-이/히’로 헛갈리는 것의 세 경우를 ‘분명히’ 구별하는 기준은 개인이나 지역 방언에 따라 차이가 있어 새 규정도 매우 애매한 규정이다. 가령, 어간이 똑같이 ㄱ음으로 끝난 다음 단어들조차 ‘-이, -히’의 양상은 개인과 지역에 따라 다르거니와 표준판이나 금성판 사전에서는 다음 ①의 경우 ‘-이’로 적혀 있고 ②는 ‘-히’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사람에 따라 ‘-이/히’로 혼동되고 있어 새 규정에 따르면 ‘-히’로 적어야 한다.

① 그옥이,깊숙이,빹빹이,수북이,소북이,자욱이,시무룩이

② 가득히,머쓱히,뚝뚝히,넉넉히,술직히,톡톡히

(10) 기타

57항의 ‘-(으)리만큼’과 관련한 설명에서 이것의 준꼴로 ‘-(으)크만큼’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이니만큼’과 준꼴인 ‘-인만큼’이 이유를 나타내는 어미로 같은 것이듯 ‘-(으)리만큼’도 ‘싫증이 {나리만큼=날만큼} 잔 소리를 들었다’의 예처럼 준꼴 ‘-크만큼’도 잘 쓰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의 ‘-크만큼’은 ‘먹을 만큼만 먹어라’에서 쓰인 정도의 의존명사 ‘-(으)크만큼’과 구별해야 한다.

5.3. 문장 부호

다른 어느 규정 부문보다도 전면적 개정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문장부호 규정은 부록에서 독립하고 상세화하여 장차 독립 편람(manual)을 제공하여야 한다.

(1) 현행 교과서들을 보면 직접 인용문이 다른 문장에 내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인용문 마지막에 마침표를 하고 있는데 시각적으로 어색하므로 그런 경우는 생략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그는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말을 했다. → 그는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말했다.

(2) 어떤 문장 뒤에 소괄호로 보충 설명을 할 때 마침표를 찍는지의 여부도 규정이 필요하다. 소괄호 문장이 바로 앞 문장과 긴밀하면 두 문장의 마침표를 묶어 괄호 밖에 하나만 하고 덜 긴밀하면 따로따로 마침표를 하는 방법도 가능한데 긴밀성의 구별이 주관적이고 모호하므로 두 문장의 마침표를 묶어 괄호 밖에 하나만 하는 것으로 통일함이 좋다.

우리 사회의 무질서는 심각한 수준이다(그 구체적 실상은 뒤 3장에서 다루겠다).

(3) 쉼표 없이도 열거 사항임을 쉽게 알 수 있거나, 또는 상위 문장 구조에서의 쉼표의 사용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하위 문장 구조에서의 쉼표를 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쉼표를 붙이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필요하다. 이는 쉼표의 남용과 시각적으로 쉼표가 많아 지저분하고 복잡해 보이는 번잡스러움을 막기 위함이다.

- ① 영수 철수가 같이 있어요 (단순 열거가 드러날 때)
- ② 규정을 보완 수정 제출할 것. (단순 열거가 드러날 때)
- ③ 미국, 한국 일본과 대북 공조 약속 (신문 표제어에서 쓰이는 예로 상위 구조의 주어 '미국'을 표시하기 위해 하위 구조의 '한국, 일본' 사이에 쉼표 사용하지 않음)

(4) 다음 예처럼 ‘ ’ 사항에 대해 () 정보가 덧붙을 때 ()를 ‘ ’ 안에 하거나 밖에 하거나 혼용하므로 통일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는 외연 방식이 정보 경계가 분명하고 간결하다고 본다.

외연 방식: ‘김길동’(金吉東). ‘김길동’(1920-1998)

내포 방식: ‘김길동(金吉東)’. ‘김길동(1920-1998)’

(5) 단행본, 논문집과 같은 책과 작품명, 논문명의 이름을 구별 표시할 때는 < >와 「 」와 ‘ ’, ≪ ≫와 『 』와 “ ”은 상호 통용할 수 있도록 함이 좋다.

시집 ≪진달래꽃≫에 나오는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을 읽었다.

=시집 『진달래꽃』에 나오는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을 읽었다.

=시집 “진달래꽃”에 나오는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을 읽었다.

(6) 부호명 중에 ‘붙임표’(·)라는 용어는 음악의 붙임줄(∧)과 혼동 우려가 있고 부호로 긴줄 모양의 횡선, 곧 줄표(—)라는 것을 두고 있는 만큼 기억의 편리를 위해 ‘줄표’는 ‘긴줄표’ 또는 ‘줄표’로, ‘붙임표’는 ‘짧은줄표’로 대비시켜 부르는 것도 좋을 것이다.

5.4. 표준어 규정

(1) 표준어 규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맞춤법 규정과 차이점이 없는 경우이다. 즉, 두 규정의 어느 곳에 두어야 하는지가 애매한 규정이 뒤섞여 있어 규정의 변별성이 떨어진다.

(2) 1988년 규정에서는 단수, 복수 표준어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단수 표준어는 ①비슷한 발음이나 형태에서 택한 것(17항: 귀고리-귀엣고리*, 봉숭아-봉숭화*), ②동의어 중에서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는 것(25항: 고구마-참감자*, 셋별-새벽별*)의 두 경우가 있다. 복수 표준어는 ①비슷한 발음의 두 형태가 같은 의미로 널리 쓰이는 것(18항: 네-예, 소고기-쇠고기), 유사하되 어감의 차이가 있는 것(19항: 거슴츠레-게슴츠레, 꼬까-꼬까),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는 것(26항: 가뭇-가물, 개수통-설거지통)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같은 단수 표준어라 해도 17항과 25항의 소속 차이가 불분명한 예들이 있다. 17항은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에 속하고 25항은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에 속한다는 차이가 있어 겉으로는 구별되는 듯이 보이지만 25항에는 제2장의 17항에 속할 발음 변화에 따른 예들로 볼 것들이 일부 들어 있다(광주리-광우리, 겹사겹사-겹지겹지, 부지깽이-부지뽕이, 언뜻-편뜻).

복수 표준어에서도 제2장 발음 변화의 예인 18항과 제3장 어휘 선택 변화의 예인 26항의 소속 차이가 불분명한 예가 있다. 26항의 '가뭇-가물, 가엿다-가엽다, 녁굴-딩굴, 들락거리다-들랑거리다, -뜨리다--트리다, 서럽다-썰다, -세요--서요' 등은 발음 변화의 예로 볼 수 있어 18항에 넣어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2장과 3장의 차이가 불분명하게 처리되는 데 기인한다. 3

장(20항-26항)을 어휘론적 차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으면 고어, 방언, 한자어라는 어휘론적 차원의 예들로만 철저히 제한했어야 하는데 3장의 용례들 중에는 발음 변화에 따른 예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혼란을 준다.

따라서 25, 26항의 용례들 중에서 ‘광주리-광우리*’, 가뭄-가물처럼 유사 형태이면서 발음 변화 차이로 인한 형태들은 17항, 18항으로 소속시키고 25, 26항에는 ‘고치다-낮우다*’, 손목시계-팔목시계*, 가는 허리-잔 허리, 옥수수-강냉이’처럼 상이 어형들의 예를 중심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3) 복수 표준어 개념의 혼란: 1990년에 사정한 <표준어 모음>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우선 일러두기에 ‘발짓-발질’을 설명한 것을 보면 두 단어가 유사하지만 뜻이 다르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런데 관련 규정에는 복수 표준어 규정인 26항 어휘로 본다고 하였다.

26항은 복수 표준어 규정으로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밝히고 있어 분명히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이라는 표현은 완전동의어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런 것만을 복수 표준어로 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갑자기 뒤늦게 1990년에 공포한 <표준어 모음> 규정에 와서는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뜻인 ‘발짓-발질’을 26항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복수 표준어의 개념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더욱이 <표준어 모음의 심의 경위와 해설> 주 2번에 보면 ‘복수 표준어와 단수 표준어라는 용어는 편의상 붙인 용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복수 표준어라고 하여 그 의미가 완전히 동일한 단어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단수 표준어라고 하여 해당 의미를 가지는 말로서 그 단어만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26항에서 밝힌 규정의 설명을 완전

히 뒤집고 헛갈리게 하고 있다.

어휘를 사정하는 표준어 규정부터 '편의상 붙인 용어' 운운하면서 용어 사용을 편의상 해서 될 일인지 의심스럽다. 드디어 주 2번의 끝 부분에 가서는 '복수 표준어와 단수 표준어가 엄격히 구별되는 용어가 아닌 것이 다'라고 복수 표준어와 단수 표준어라는 용어가 같은 뜻으로도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아 기이한 선언으로 치달았다.

복수 표준어와 단수 표준어라는 두 용어가 엄격히 구별되지도 않는다면 비슷한 말 내지는 동의어일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계속 혼란스럽다. 도무지 이런 혼란을 일으킬 바에야 표준어 사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규정 해설서가 이처럼 헛갈린다면 교사가 이것을 가르치고 학생이나 일반 대중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처럼 '표준어 규정'(1988)과 다른 복수 표준어 개념을 적용한 '표준어 모음'(1990)에서는 완전동의어가 아닌 예들 즉 유사어들을 마구 복수 표준어로 제시하고 있으니 '활전-활짝, 가려잡다-골라잡다, 소용없다-쓸데없다, 안개비-가랑비, 기장-길이, 늦장-늑장, 단절음에-단숨에' 등처럼 문맥 분포에 따라 다소 의미가 다른 경우들까지 복수 표준어로 보고 있으며 특히 '도토리나무-떡갈나무, 두견새-소쩍새, 주꾸미-꼴뚜기'처럼 생물학적으로 별개인 사물까지 복수 표준어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표준어 규정(1988)의 복수 표준어 개념과 같은 유형도 포함하고 있으니 '검정콩-검은콩, 소낙비-소나기, 각시-새색시, 꺾속말-귀엣말, 멧돼지-산돼지, 크낙새-골락새, 호랑나비-범나비, 시골말-사투리, 제비꽃-오랑캐꽃, 껌벅거리다-끔벅거리다, 평화스럽다-평화롭다' 등이 그것이다.

우리는 애초 26항 규정에서 밝힌 대로 복수 표준어는 개념적 의미가 완전동의어 관계인 것에 대해서만 정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26

항과 같은 표준어 규정에서는 문체적 의미, 속성적 의미, 내포적 의미 등은 무시하고 개념적(사전적, 기본적) 의미 차원 정도에서만 대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완전동의어 개념을 설정할 수 있다. 실제로 26항에 나오는 예들은 대개 언중들이 완전동의어라고 보는 것들이다. 따라서 <표준어 모음>에서 이렇게 1988년 <표준어 규정>의 복수 표준어 개념을 뒤집은 태도는 폐기해야 한다.

(4) 표준어 사례 공시(公示)의 신중성 추구 - 적용의 주관성 배제

표준어 규정에서는 ‘소-, 쇠-’를 둘 다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국어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새국어소식’(1999. 8월호, 통권 13호)에서는 이것이 모두 다 그런 것이 아니라며 ‘쇠-’로만 할 것과 ‘소-’로만 할 것이 있다고 다음 예외 용례들을 제시하였다.

쇠-: 쇠똥구리(=쇠똥벌레), 쇠똥굽뽕이, 쇠발개발(소의 발, 개의 발이란 뜻으로 아주 더러운 발을 비유한 말), 쇠뼈다귀, 쇠뿔하늘가재, 쇠서
저냐(소 혀로 만든 저냐), 쇠족지짐이, 쇠파리...

소-: 소갈이, 소겨리, 소늬음긋, 소늬이긋, 소도독(늬), 소띠, 소물이(꾼), 소바리(꾼), 소싸움놀이, 소씨, 소우변(-牛邊)

그러나 ‘소고기, 소꼬리, 소똥, 소머리, 소뺨, 소털’ 등은 ‘쇠-’를 허용하면서 위 예처럼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그 근거가 아마도 특정음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 때문일 것인데 굳어진 정도의 판단은 판단자들의 주관에 작용하기 쉬웠을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예외 처리가 불필요하다고 본다. ‘쇠똥’을 ‘소똥’도 허용한다면 ‘쇠똥구리’도 비록 그것이 상당히 생물학적 명칭으로 굳어진 듯하여도 ‘소똥구리’도 허용하고 쓸 사람은 쓰고 안 쓸 사람은 안 쓰면 되기 때문이다.

‘소뼈’도 ‘쇠뼈’는 허용하면서 ‘쇠뼈다귀’는 ‘소뼈다귀’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5) 표준어 규정에 나오는 비표준어 문제: 표준어 규정에 비속어가 들어가 있어 모순된다. 다음은 그런 비속어 예이다. 이들은 규정에서 제거해야 한다.

시러배아들, 튀기, 상판대기, 까몽개다, 짓고땡, 서방질-화냥질, 오사리잡놈, 오색잡놈, 털어먹다, 발모가지, 발목쟁이, 죽살이, 한통치다, 늑다리, 개다리소반, 뒤통수치다, 빙충이, 까까중/중대가리, 볼따구니/볼통이/볼때기

(6) 방언형을 표준어로 승격하는 데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 방언형 중에서 국어 어휘부를 풍성히 하는 것들은 많이 발굴하고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가령 시어로 널리 쓰이는 ‘영글다’ 같은 경우는 ‘여물다’가 맞다고 하지만 ‘곡식이 영글어가는 가을...’ 할 때 ‘여물다’보다도 시적 정취가 있어 ‘여물다’의 비표준형이라고 폐기시킬 것이 아니라 ‘여물다-영글다’를 복수 표준어로 승격할 만하다.

(7) ‘서럽다, 싫다’를 복수 표준어에 넣었으나 ‘싫다’는 그 활용형이 거의 안 쓰이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20항의 ‘애달프다-애닦다*’와 같은 처리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옥수수, 강냉이’도 23항의 방언 복수 표준어에 넣어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멀찌감치-멀찌가니-멀찍이’로 했으면 ‘일찌감치-일찌거니’에도 ‘일찍이’를 추가했어야 한다.

‘추어올리다 추어주다’는 인정했는데 가장 흔하게 쓰이는 ‘추켜올리다’는 비표준어로 하여 현실과 멀다. 또한 ‘치켜올리다, 치켜세우다’도 같이 다루었어야 한다.

(8) ‘수-’의 옛말이 ㅎ 종성체언으로 ‘송-’가 변한 ‘숫-’이었고 아직도 발음에는 ‘숫-’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존중하는 쪽으로 규정이 다음과 같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①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숫-’을 기본형으로 한다.
숫나사, 숫놈, 숫사돈, 숫소, 숫은행나무, 숫양, 숫염소, 숫쥐
- ② 뒤에 오는 단어가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나는 경우는 ‘수-’로 한다.
거센소리: 수종각, 수강아지, 수캐, 수탉, 수펄, 수평아리
된 소 리: 수평, 수까마귀, 수빠꾸기

이러한 처리는 12항에서 ‘윗-’을 기본으로 하고 거센소리, 된소리 앞에 서는 ‘위-’를 쓰도록 한 것과 같은 태도다. ‘위’의 옛말 ‘우’도 중세에는 ‘송’처럼 ㅎ 종성체언 ‘웅’이었으므로 같은 원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9) ‘괴팍(乖悖)하다’는 변한 음 ‘팍’으로 했는데 ‘강팍(剛悖)하다, 팍(悖)하다’는 본음 ‘팍’으로 유지하여 기억에 부담을 준다. ‘강팍’은 자주 쓰이지 않고 ‘괴팍’은 자주 쓰여 차이를 두었다는 해설은 설득력이 없다.

5.5. 외래어 표기

(1) 프랑스어, 독일어와 같은 비영어계 외래어가 영어계 외래어와 공존할 때 어느 것을 기준으로 외래어를 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정해야 할 것

이다. 가령, 프랑스어 rouge[ru:ʒ]는 우리가 정한 외래어 표기법의 프랑스어 외래어 규정 제2항에서 “어말과 자음 앞의 [ʃ][ʒ]는 ‘슈, 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루주’로 해야 한다. 표준판 사전에도 이것이 등재되어 있다. 반면에 영어 rouge[ru:ʒ]는 영어 외래어 규정 제3항의 3항 “어말 또는 자음 앞의 [ʒ]는 ‘지’로 적고 모음 앞의 [ʒ]는 ‘ㅈ’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루지’로 해야 한다. 그러나 언중의 관용 표기는 ‘루즈’가 많아 괴리를 보인다.

(2) 외래어 표기법 규정에서는 외래어의 발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가령 ‘버스, 갱, 배지, 서비스, 센터...’ 등의 현실음은 경음인데 표기대로 평음으로 발음해야 하는지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언급이 없음은 일단 표기된 평음대로 하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초등 교육 단계에서부터 평음 발음이 잘 되도록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외래어 표기법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명확한 발음 규정이 덧붙여야 할 것이다.

(3) 현 규정 기본원칙의 1항에서 된소리자와 겹글자 모음들을 뺀 현용 24(자음 14, 모음 10)자모만 쓴다고 규정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된소리자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뒤 4항에 다시 언급되어 당연히 자음 14자만 쓰게 되므로 중복 규정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또한 24자에 포함된 모음 외에 해당하는 겹글자 모음(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등은 외래어 표기에서 너무나 잘 쓰이므로 24자 중에 모음 10자로 제한한 것은 비현실적 규정이다.

따라서 1항은 불필요하며 1항과 4항을 합하여 “현용 한글 자모(40자) 중 된소리 표기는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고쳐 국어 순화를 위해 된소리 표기만 억제함을 선언하면 될 것이다.

(4) 외래어 규범 연구는 외래어 자료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데 국어 외래어 규범 연구를 위해서는 일본 외래어 연구 동향과도 밀접한 대조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일본 외래어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고빈도 외래어는

‘service, system, share, energy, recycle, center, network, gas, cost, base’ 등과 같다(일본 국립국어연구소 2000).

5.6 로마자 표기

2000년 7월에 새 로마자표기법이 공표되었는데 일단은 철저한 준수가 관건이다. 우선, 성명 표기는 출생 신고시부터 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정 되었으면 한다. 현재의 외교통상부 관할 여권 발급시 쓰이는 인명 표기는 현행 로마자 표기법과 무관하게 쓰이고 있어 이에 대해 부처간 협조부터 해야 새 로마자 표기법이 정착될 것이다. 이를 위해 성명 로마자 표기법은 기존 가문별 통용안을 존중하여 혐오감을 주는 경우(Gang, Bang, No 등)를 제외하고 권장 표준안을 만들어야 한다.

5.7. 문장 규범

우리가 바른 언어 생활을 단어 차원의 표기로만 좁혀 생각하고 국어 교육에서 국어 순화나 오용언어에 대한 예방 교육도 그런 단어 차원의 기술로만 그치고 문법 교육이 표류하다 보니 국민의 문장 능력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인식은 때로는 교육과정의 내용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즉, 7차 교육과정의 국어생활 과목의 교과과정 내용에 ‘규범’을 익히는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인즉 단어의 개념을 교과서에서 좁게 보는 데서도 나타난다.

국어에 비문(非文)이 많은 이유도 국어에 주어 생략이 많아 논리적 흐름을 잃는 수가 많고 문장 끊기와 연결에 미숙한 때문으로 본다. 또한 가주어(假主語)를 세우면서까지 주어를 세우는 영어와 주어 생략이 혼한

국어를 비교할 때 ‘국어는 비논리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외국어학자들도 있지만 우리는 성분 실종과 성분 생략은 구별하여야 한다고 본다. 성분 생략을 즐기며 능란한 국어 작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못한 채 성분 실종의 글쓰기만 하는 국어 작문 교육이 문제이지 국어가 비논리적이어서가 아니다.

이러한 문장의 오류는 이미 여러 유형의 오류 유형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범 문법적 계도가 필요하고 명확한 권위를 가지고 계도하려면 역시 정확하고도 상세한 규범 문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주변에서 전문가들끼리도 통일되지 않은 견해를 문법 범주에서 발견하게 된다. 가령, 다음의 예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 판단하여 보면 학자들도 두 의견이 나온다.

- ① 올림픽 축구 경기에서, 한국이 스페인에 3 대 1로 졌습니다.
- ② 올림픽 축구 경기에서, 한국이 스페인에게 3 대 1로 졌습니다.

스페인을 유정명사로 보느냐 부정명사로 보느냐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런 예부터 명료한 문법 규범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

5.8. 담화 규범

전술한 대로 국어연구원에서는 그 동안 학계가 화용론, 담화텍스트언어학, 인지언어학 분야에 활발한 관심을 가져 온 데 반하여 특히 담화 연구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담화 영역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담화 규범의 수립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가령, 속도, 고저, 강세, 음량, 음질 등의 준언어적 표현이나 표정, 눈길, 손짓, 몸짓, 장면의 시간과 공간 요인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서도

학계에 용어와 개념의 혼란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한국인 특유의 언어 행동에 대해서도 체계적 연구가 요구된다.

아울러 담화 표현의 적절성, 수사법, 설득력 등 내용의 질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가령, 표준화법(1992)에서의 비현실적이거나 부정확한 기술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가령, 표준화법(1992)에서 누이의 남편은 ‘매부, 매형, 자형’으로 하며 여동생의 남편은 ‘매부, 서방’식으로 하라고 했으나 여동생의 남편은 ‘매제’도 잘 쓰이는데 표준화법(1992:38-9)에서는 사전들에도 나오는 ‘매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아 추가할 필요가 있다.

6.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언어 규범의 제문제를 살피면서 특별히 21 세기 남북 통일 시대에는 언어 규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정책의 방향은 프랑스식 규범 정책과 미국식 자율 규범 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규범의 개념에 대해서는 기존의 단어 범주에 국한된 사고의 틀에서 떠나 문장 규범과 담화 규범에 대하여서도 연구가 되어야 하며 그러한 방향에 대하여서도 국어연구원의 역할이 중대하다고 보았다. 문장 규범으로서의 ‘문법’에 대한 연구도 한국어교육에서는 매우 미진한 상태임을 지적하였다. 특히 규범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어연구원이 말뭉치 자료의 구축과 말뭉치 기반 문법 연구도 선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규범에 대한 거시적 정책의 방향으로서는 영어제국주의 시대에 국어 수호를 위해 ‘국어 사용법’과 같은 법률적 기반이 요구되며, 시급한 현안으

로는 남북 통합 어문 규범을 준비하고 현행 규범의 지속적 정비, 학문 용어의 번역 의무화, 표준국어대사전의 지속적 수정 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미시적 정책의 방향으로는 국어 어문 규범의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바야흐로 우리는 21 세기에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민족과 한국 문화를 동아시아에서 번영시키고 한국어를 세계어로 발전시킴으로써 500여 년 전 세종이 꿈꾸었던 한글 문화의 이상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 꿈은 오직 우리 모두가 매일 바른 언어 생활을 향한 작은 습관과 노력을 실천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안정된 언어 규범이 존재할 때에야 가능하다고 믿는다.

<부록> 프랑스어 사용법 (1994년 8월 4일)

제1조

헌법이 공화국의 언어로 선포한 불어는, 프랑스의 인격과 유산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불어는 교육, 노동, 교역, 공공업무의 언어이다. 불어는 불어권 공동체를 구성하는 국가들 사이의 특권적인 연결이다.

제2조

재화, 제품 또는 용역의 명칭, 제공, 소개, 사용법, 보증 기간과 조건의 記述 그리고 송장과 영수증에서 불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한다. 동일한 규정이 모든 문자, 口頭 또는 방송 광고에 적용된다. 이 조의 규정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외국어 명칭의 특산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표에 관한 법은, 1항 그리고 3항을 상표와 함께 등록된 언급과 傳言에 적용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제3조

공공 통로,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 또는 대중교통 수단 내부의,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모든 게시 또는 告知는 불어로 실시한다.

위 규정에 위배되게 작성된 게시문이, 제3의 이용자에 의해 공법상의 법인에게 속하는 재화에 부착되면, 그 법인은 이용자에게, 법인이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의 비용으로, 불법 게시문을 철거하라고 최고한다.

최고가 효과가 없으면, 계약 또는 허가 조항에 관계없이, 위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재화의 이용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4조

公法상의 법인 또는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이 부착하는, 3조의 적용을 받는 게시 또는 告知文에 번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한다.

2조와 3조에서 규정된 언급, 고지, 게시를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번역으로 보완하는 모든 경우에, 붙어 원문은 외국어 번역만큼 읽고 듣기 쉽거나 이해 가능해야 한다.

국제운송 분야에서 이 조항의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와 조건은, 국가참사원의 법령으로 명시한다.

제5조

公법상의 법인 또는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이 당사자인 계약은, 그 대상과 형태를 막론하고, 붙어로 작성한다. 이 계약은, 붙어 어휘 다양화에 관한 규정이 정한 조건에서 승인된 동일 의미의 붙어 표현 또는 용어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 표현이나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산업적이고 상업적인 성격의 활동을 관리하는 공법상의 법인, 프랑스 은행 또는 예금공탁금고에 의해 체결되고, 전적으로 국토 밖에서 집행되는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항목의 적용을 위하여, 일반 조세법 131조 4항의 조건부로 발행된 공채, 그리고 1996년 7월 2일자 재무 활동의 현대화 법(96-597호) 4조가 의미하는 투자 용역의 제공에 관련되고 그 집행이 외국 사법권의 관할인 계약은, 전적으로 프랑스 밖에서 집행된다고 간주한다.

하나 또는 여러 명의 외국 공동계약자와 체결하고,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계약은, 붙어 판 외에, 동등하게 유효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외국어 판을 포함할 수 있다.

1항에 위배되게 외국어로 작성된 계약 조항은, 계약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없다.

제6조

프랑스 국적의 개인 또는 법인이 프랑스에서 주최하는 행사, 학회, 회의의 모든 참가자는 불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행사 이전과 도중에 참가자에게 배포되는 프로그램 관련 자료는 불어로 작성하고,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외국어로 번역할 수 있다.

행사, 학회, 회의가 참가자에게 예비 자료 또는 업무 자료를 배포하거나, 회의록 또는 보고서를 출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외국어로 작성된 문건에는 불어 요약을 첨부한다.

이 규정은 외국인만 관계되는 행사, 학회, 회의 그리고 프랑스 무역의 진흥 행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법상의 법인 또는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私法상의 법인, 이 조의 적용을 받는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에는, 번역 부서를 배치한다.

제7조

공법상의 법인,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私人 또는 공적 지원금을 받는 사인이 발행하고 프랑스에서 배포되는 출판물, 잡지, 발표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불어 요약을 첨부한다.

제8조

노동법 L. 121-1조의 마지막 세 개의 항목을 아래와 같은 네 개의 항목으로 대체한다.

“문서로 기록되는 노동 계약은 불어로 작성한다.”

“계약의 대상인 직무가, 불어 해당어가 없는 외국어 용어에 의해서 지

칭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노동 계약서는 외국어 용어를 불어로 설명한다.”

“임금노동자가 외국인이고 계약이 문서로 기록되는 경우에는, 그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서를 그의 언어로 번역한다. 원문과 번역문은 법정에서 동등하게 유효하다. 이 두 가지 문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임금노동자의 언어로 작성된 문서만이 그에 대하여 불리하게 제시될 수 있다.”

“고용주는, 이 조에 위배되게 체결된 노동 계약의 조항에 의거하여 임금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9조

I.

노동법 L. 122-35조를 아래 항목에 의해 보완한다.

“내규는 불어로 작성하고,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외국어 번역을 첨부할 수 있다.”

II.

노동법 L. 122-39조 다음에 아래와 같은 L. 122-39-1조를 삽입한다.

“L. 122-39-1조 임금노동자의 의무 또는 그가 노동의 실행을 위하여 알 필요가 있는 규정을 포함하는 모든 문서는 불어로 작성되고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외국어 번역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외국으로부터 접수하거나 외국인 대상의 문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I.

노동법 L. 122-37조의 1항과 3항에서 “L. 122-34조와 L. 122-35조”는 “L.

122-34조, L. 122-35조, L. 122-39-1조”로 대체된다. IV. 노동법 L. 132-2조 다음에 L. 132-2-1조를 삽입한다.

“L. 132-2-1조. 단체 노동협약 그리고 기업 또는 기관의 협정은 불어로 작성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규정은 임금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없다.”

제10조

노동법 L. 311-4조의 3항은 다음과 같다

“3. 외국어로 작성한 문서”

“제공된 직무 또는 노동이, 불어 해당어가 없는 외국어 용어에 의해서 지칭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2항의 의미에 대해 오류를 유발하지 않도록 불어 문서는 그 용어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2항과 3항이 규정한 금지는, 제공자나 고용주의 국적을 막론하고 또 직무를 위한 조건 중의 하나가 완벽한 외국어 지식인 경우에도, 프랑스 국토에서 집행되는 용역에 적용된다. 제공자나 고용주가 프랑스 사람인 경우에는 프랑스 국토 밖에서 집행되는 용역에도 동일한 금지를 적용한다. 그렇지만 프랑스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외국어로 제작되는 출판물의 대표는, 그 언어로 작성된 구인 광고를 접수할 수 있다.

제11조

I.

공사립 교육기관에서 교육, 시험, 선발대회 그리고 학위논문의 언어는 불어이다. 단, 지방 또는 외국 언어와 문화를 교육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외국인 객원 또는 초빙 교수가 교육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

다.

외국인 학교 또는 외국 국적의 학생을 위한 특수 학교 그리고 국제적 성격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이런 의무가 없다.

II.

1989년 7월 10일자 교육 방침 법(89-486호) 1조 2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항목을 삽입한다.

“불어의 숙달과 다른 언어 두 개에 대한 지식 습득이 교육의 기본 목적에 속한다.”

제12조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자 법(86-1067호) 2장 1절 앞에, 아래와 같은 20-1조를 삽입한다.

“20-1조.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방송과 광고 전체에서, 그 전파 또는 배급 방식을 막론하고, 불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한다. 단, 원어판 영화와 방송 작품은 예외로 한다.”

“위 항목은, 이 법 28조 2 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원문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외국어로 작성된 음악 작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항이 정한 의무는, 전적으로 외국어로 전파되거나 언어 학습이 목적인 프로그램과 그 속에 포함된 광고 그리고 문화적 의식의 중계방송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1항의 적용을 받는 방송 또는 광고에 외국어 번역이 첨부되는 경우에는, 불어판은 외국어판만큼 읽고 듣기 쉽거나 이해 가능해야 된다.

제13조

위에서 인용된 1986년 9월 30일자 법(86-1067호)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

다.

24조 Ⅱ의 6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항목을 삽입한다.

“불어의 존중과 불어권의 선양”

Ⅱ.

28조 4 다음에 아래와 같은 4 乙이 삽입된다.

“4 乙. 불어의 존중과 불어권의 선양을 보장하는 규정”

Ⅲ.

33조 2 다음에 아래와 같은 2 乙이 삽입된다.

“2 乙. 불어의 존중과 불어권의 선양을 보장하는 규정.”

제14조

I. 외국어 표현이나 용어로 구성된 상표의 사용은, 불어 어휘 다양화 관련 규정이 정한 조건에서 승인된 동일 의미의 불어 표현 또는 용어가 있는 경우에는, 공법상의 법인에게 금지된다.

이 금지는, 공공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상의 법인이 이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Ⅱ. 이 조항의 규정은, 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 처음으로 사용된 상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5조

공공단체와 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성격의 지원금 수혜자는,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수혜자에게, 위반을 지적한 후에, 지원금 전체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활동하는 사법경찰 외에, 소비자 보호법 L. 215-1조 1, 3, 4에 열거된 공무원은 이 법 2조의 시행을 위해 채택된 규정에 대한 위반을 적발할 권한이 있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은, 同法 L. 213-4조 1항에 열거된 장소와 차량 내부 그리고 L. 216-1조에서 언급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안으로 낮에 들어갈 수 있다. 단,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장소는 예외로 한다.

그는 임무 수행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고, 그것을 복사하며, 임무 수행에 적합한 정보와 해명을 현장에서 아니면 소환에 의하여 수집하고 청취할 수 있다. 또한 그는 국가참사원의 법령으로 정한 조건에서 문제시된 재화 또는 제품 한 점을 先取할 수 있다.

제17조

16조 1항에서 언급된 공무원의 임무 수행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방해하거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형법 433-5조 2항에 정해진 처벌을 받는다.

제18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해 채택된 규정에 대한 위반은 조서에 기록되고, 이 조서는 반증이 나타날 때까지 유효하다. 조서는 종결 후 5일 안에 공화국 검사에게 송부되고,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 또한 그 사본 한 부를 같은 기간 내에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제19조

형사소송법 2-13조 다음에, 아래와 같은 2-14조를 삽입한다. “2-14. 불어의 수호를 정관에 천명하고, 국가참사원의 법령으로 정한 조건에서 인

가된 모든 정규 협회는, 1994년 8월 4일자 불어 사용법(94-665호) 2, 3, 4, 6, 7, 10조의 시행을 위해 채택된 규정에 대한 위반에 관련된 소송에서, 손해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0조

이 법은 공공 영역의 법이다.

이 법은 시행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적용한다.

제21조

이 법의 규정은 프랑스의 지방어에 관한 법률과 법규를 침해하지 않고, 지방어 사용에 반하지 않는다. 제22조. 매년 정부는 이 법의 시행 그리고 국제 기구 내부에서 불어의 위상에 관한 국제 조약 또는 협정의 적용에 대한 보고서를 9월 15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한다.

제23조

이 법 2조는 그 규정에 대한 위반을 정의하는 국가참사원의 법령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고, 아무리 늦어도 이 법의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4조는 2조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조. 불어 사용에 관한 1975년 12월 31일자 법(75-1349호)은 폐기한다. 단 그 법 1-3조는 이 법 2조의 시행과 함께, 그 법 6조는 이 법 3조 시행일에 폐기된다.

이 법은 국법으로서 집행한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연구원: 조선일보(1992), 우리말의 예절, 조선일보사
- 국어학회(1993), 세계의 언어정책, 태학사
- 김민수(1974), 국어정책론, 고려대 출판부/탑출판사
- 김영명(2000-), 나는 고발한다. 김영명 교수의 영어 사대주의 뛰어넘기, 한겨레신문사
- _____(2000-), 한글 사회과학의 모색, 한글사랑 13호(2000년 봄호), 한글사
- _____(2000-), 세계화와 언어 문제, 동아시아의 세계화와 언어제국주의,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회 국제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2000. 11. 10, 세종문화회관)
- 남영신(1998), 세계화 위해 민족 버리자고? 조선일보 7월 7일자 13면
- 민현식(1999), 국어 정서법 연구, 태학사
- _____(2000), 국어교육을 위한 응용국어학연구, 서울대 출판부
- _____(2000),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의 현황과 과제, 새국어생활 10-2(2000 여름호), 국립국어연구원
- _____(2000), 공용어의 개념과 언어정책, 이중언어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중언어학 17집
- 박병수(2000), 영어의 열풍, 한글사랑 13호(2000년 봄호), 한글사
- 백경숙(2000), 영어 공용어화론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소고, 사회언어학 8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 백봉자(199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동방학지 71-72 합본, 연세대
- _____(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연세대 출판부
- 북거일(1998),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 문학과 지성사
- _____(2000), 소위 민족주의자들이여! 당신네 자식이 선택하게 하라, 신동아 3월호
- 안정효(2000), 영어에 미친 나라, 한글사랑 13호(2000년 봄호), 한글사
- 이병혁(2000), 세계화와 남북한 언어 문제, 동아시아의 세계화와 언어제국주의,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회 국제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

- (2000. 11. 10, 세종문화회관)
- 이상억(1997), 역대 문법 교과서에 반영된 음변화 및 통사 현상의 분포 조사, 관악어문연구 제21집, 서울대
- _____(1998), 외국인용 한국어 교재에 포함된 문법 사항의 비교 평가, 한국어 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석주·이주행·이주행·민현식(2000), 옥외광고물 외래어 간판 실태 조사 연구, 문화부 국어정책과 연구보고서
- 이연숙(2000), 일본의 영어공용어화론, 동아시아의 세계화와 언어제국주의,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회 국제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2000. 11. 10, 세종문화회관)
- 이재진(2000), 언어정책 이대로 좋은가, 한글사랑 13호(2000년 봄호), 한글사
- 이혜란 외 역(1995), 2개 언어상용과 그 이론, 한국문화사[Josiane F. Hamers & Michel H. A. Blanc(1987), Bilinguality and Bilingu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정시호(2000), 영어 찬미자들에게 엄중 경고함, 신동아 4월호
- 정종남(1999), 남북한 한자어 어떻게 다른가, 을지서적
- _____(2000), 북한 주민이 알아야 할 남한 어휘 3300개, 종로서적
- LG 경제 연구원(2000), 밀레니엄 리포트, 도서출판 새로운 제안
- 國立國語研究所(2000), 白書, 廣報紙等における外來語の實態, 國立國語研究所
- 津田幸男(1990), 英語支配の構造: 日本人と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 日本: 第三書館
- _____(1993), 英語支配への異論, 日本: 第三書館
- 三浦信孝·糟谷啓介(2000), 言語帝國主義とは何か, 日本: 藤原書店
- 豊田國夫(1964), 民族と言語の問題: 言語政策の課題とその考察, 東京: 錦正社
- _____(1968), 言語政策の研究, 東京: 錦正社
- Biber, Douglas, Stig Johanson, Geoffrey Leech, Susan Conrad & Edward Finegan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Longman

- Calvet, Louis-Jean(1974), *Linguistique et colonialisme: petit traité de glottologie*, Paris: Payot
- Eastman, Carol M.(1983), *Language Planning an Introduction*, Chandler & Sharp Publishing, Inc.
- Fishman, Joshua A.(1966), *Language loyalty in the United States*, Mouton
- Fishman, Joshua A.(ed.)(1968), *Readings in the sociology of language*, Mouton: also Humanities Press
- Kachru, B. B.(1997), *World Englishes 2000: Resources for research and teaching*. In L. E. Smith & M. L. Forman(eds.), *World Englishes 2000*, Honolulu,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 Mühlhäusler, P(2000), *Linguistic ecology: Language change and linguistic imperialism in the Pacific region*, London: Routledge
- Pennycook, A.(1994), *The Cultural politics of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London: Longman
- _____(1998), *English and the discourses of colonialism*, New York: Routledge
- Phillipson, R.(1992), *Linguistic imperi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2000), *The Globalization of English*, 동아시아의 세계화와 언어제국 주의,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회 국제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2000. 11. 10, 세종문화회관)
- Smith, L. E.(1983),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In L. E. Smith(Ed.). *Readings in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Oxford: Pergamon Press
- Stewart, William A.(1968), *A Sociolinguistic typology for describing multilingualism*, In Fishman ed.(1968)
- Tollefson, James W.(1991), *Planning Language, Planning Inequality : language policy in the community*, Longman
- UNESCO(1951), *The Use of Vernacular Languages in Education:The Report of the UNESCO Meeting of Specialists, 1951, Paris*, In Fishman ed.(1968).